

## AURI POLICY UPDATES

#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16  
2014. 5

##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4.4.1~4.30)

### 건축문화 부문

- '쉬엄쉬엄 산두리 산책' 선두마을로 놀러오세요
- 인천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 운영
- 신진건축사들, 능력을 보여주세요!
- 어린이 여러분을 건축창의교실에 초대합니다
- 도시인문학 시민강좌 '서울: 숲에서 책을 만나다'
- 밤이 아름다운 도시, 부산 탐방 함께 가요!
- '바로 활용' 하는 '국가인터넷지도' 선보인다
- 한옥건축박람회, 젊은 층 타깃 재미있게 바꾼다
- '한양도성의 모든 것 다 있다', 한양도성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 '해방 이후 독도' 역사와 지리정보를 한자리에!
- 간이역, 시외버스터미널 및 유희 공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
- 충북 '2014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 2개소 선정
- 부산시, 근현대 역사문화자산 보존 및 활용-구)한국은행 부산본부 취득 절차 본격화

### 녹색 건축·도시 부문

- 해외건설, 양적성장과 질적 내실화 병행추진
-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을 물 절약형으로 만든다
- 도내 신재생에너지 주택 519가구 짓는다
- 울산시,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든다.
- 내년도 건설업계 해외진출 '정부지원' 시작됐다!
- 해외건설 新시장 진출, 정부지원과 함께 출발!
- 빗물을 가두어 두는 도시매뉴얼 나왔다
- G밸리 94개 건물 '에너지 사용 10% 줄이기' 나선다
- 정부, '우수 중소·중견건설업체' 해외진출 집중 지원!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서울형 도시공간정보 구축사업' 청년 78인 활동 시작
- 디자인으로 범죄 예방... 셉테드 시범사업 실시
- 서울연구원, 베트남 핵심도시 싱크탱크와 연구협력 강화
- 올해 농어촌주택개량 설계비 대폭 할인
- '리조트 참사 재발 막자'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공동주택관리, 이제 정부가 직접 도와 드립니다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에 발 벗고 나선다
- 건축물도 건강검진이 필요해요
- 광역도시계획 수립, 주민 참여 길 넓혔다
-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 울산시,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 '일사편리' 서비스 이용, 100일 만에 51만 건
- 부산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 광주시,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 이슈와 연구동향 #8

노후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2009~2013)



##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4년 5월호 (통권 16호)

- 
- 발 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4. 5. 31
  - 발행인 : 제해성
  - I S S N : 2288-274X
  - 편집·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 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 연락처 : 031-478-9845
  - 이메일 : kslee@auri.re.kr(이경신)
-

##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 5 이달의 정책 Highlights
- 6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 건축문화 부문

- 8 '쉬엄쉬엄 산두리 산책' 선두마을로 놀러오세요
- 8 인천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 운영
- 9 신진건축사들, 능력을 보여주세요!
- 9 어린이 여러분을 건축창의교실에 초대합니다
- 10 도시인문학 시민강좌 '서울: 숲에서 책을 만나다'
- 10 밤이 아름다운 도시, 부산 탐방 함께 가요!
- 11 '바로 활용' 하는 '국가인터넷지도' 선보인다
- 11 한옥건축박람회, 젊은 층 타깃 재미있게 바꾼다
- 12 '한양도성의 모든 것 다 있다', 한양도성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 13 '해방 이후 독도' 역사와 지리정보를 한자리에서!
- 14 간이역, 시외버스터미널 및 유희 공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
- 15 앱다운로드 한 번으로 온나라부동산포털이 내 손에 쏙!
- 15 충북 '2014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 2개소 선정
- 16 부산시, 근현대 역사문화자산 보존 및 활용  
- 구)한국은행 부산본부 취득 절차 본격화
- 17 우리동네 골목길에 이야기벽화 있어요

## 녹색건축·도시 부문

- 18 해외건설, 양적성장과 질적 내실화 병행추진
- 19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을 물 절약형으로 만든다
- 20 도내 신재생에너지 주택 519가구 짓는다
- 20 울산시,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든다.
- 21 내년도 건설업계 해외진출 '정부지원' 시작됐다!
- 22 해외건설 新시장 진출, 정부지원과 함께 출발!
- 22 빗물을 가두어 두는 도시매뉴얼 나왔다
- 23 서울시, 건설산업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4 G밸리 94개 건물 '에너지 사용 10% 줄이기' 나선다
- 26 정부, '우수 중소·중견건설업체' 해외진출 집중 지원!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27 '서울형 도시공간정보 구축사업' 청년 78인 활동 시작
- 27 주거용 불법건축물 올해 한시적 양성화
- 28 디자인으로 범죄 예방... 셉테드 시범사업 실시
- 28 서울연구원, 베트남 핵심도시 싱크탱크와 연구협력 강화

29	올해 농어촌주택개량 설계비 대폭 할인
29	"리조트 참사 재발 막자"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30	20호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32	공동주택관리, 이제 정부가 직접 도와 드립니다
33	서울시, 공공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가이드라인 시행
34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에 발 벗고 나선다
34	건축물도 건강검진이 필요해요
35	근대역사 보물창고 좌천동, 산복도로 휴먼 빌리지로 재생
36	10년 이상 된 건축물 건강검진 의무화
36	바다를 시민들의 품으로
37	광역도시계획 수립, 주민 참여 길 넓혔다
37	지적확정측량 업무 '기간 단축되고 절차도 통일된다'
38	좁고 복잡한 골목에선 '걸음길 도우미' 이용하세요
39	'행복주택 건설' 위한 건축기준 특례 마련
39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40	울산시,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41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42	'일사편리'서비스 이용, 100일 만에 51만 건
43	성북 역사문화지구, 걷기 좋은 길로 변신한다
44	부산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45	광주시,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45	천안·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46	군산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쾌거
46	경남도, 마산합포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돼 활력 기대
47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48	조합 동의율 낮춰 소규모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속도
49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본격화
50	영주시, 전국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50	국토부, 숨은 지역 건축규제 발굴하여·상시 정비·관리하기로
<hr/>	
이슈와 연구동향 #8	52 노후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2009-2013)
<hr/>	
APU Story 아홉 번째	66 DDP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Highlights

## 건축문화 부문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5개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포항시 오천읍 복지회관'과 '수자원공사 대불정수장 환경개선사업' 2곳을 두고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일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각종 공공분야의 정보시스템, 포털지도 등에서 별도 가공 작업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한 국가인터넷지도를 구축, 올해 말부터 제공한다고 밝혀 공간정보 분야에 이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 아이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및 유휴 공간을 비롯해 총 6개 지역을 선정·발표 하였으며,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이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 발표자료 중 인천시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간 분쟁 예방 및 공공증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은 4월 24일부터 월 1회 8개 구를 순회하게 된다.

##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에서 총 10개의 사업 및 시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수주 700불 달성 및 리스크 관리지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등 해외건설의 질적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중소·중견건설업체 대상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 및 인프라 마스터 플랜·고위 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에 본격 착수를 위한 설명회 개최 내용에 대한 자료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후변화·재해 관련 및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활용 관련 건축물 건설에 대한 자료가 중점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인천시에서는 올해 4월부터 신축건축물 절수설비 설치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연간 5,000여 개소에 달하는 모든 신축건축물을 물 절약형으로 건축한다고 밝혔고, 충청남도는 도내 15개 마을 519개 가구가 '201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정부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울산시는 기후변화 및 재해와 관련해 UN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대응 능력 강화 등 재해예방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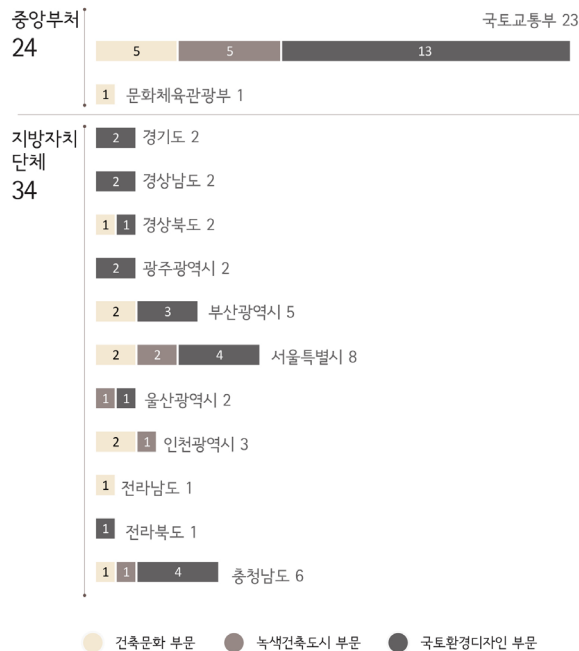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9개 광역·지자체에서 총 20건의 건축·도시 관련 사업 및 시책 20건을 발표하였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 참사'와 관련해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 및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건축기준 개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강화', '건축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와 같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는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계공무원간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행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하고 2017년까지 4년간 지정지원 및 행정·기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인 '서울형 도시공간정보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78인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경기도에서는 4월부터 디자인을 통해 범죄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2014년 4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건축·도시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해 해당 주체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8건의 발표자료 중 중앙부처에서 24건(41.3%),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34건(58.6%)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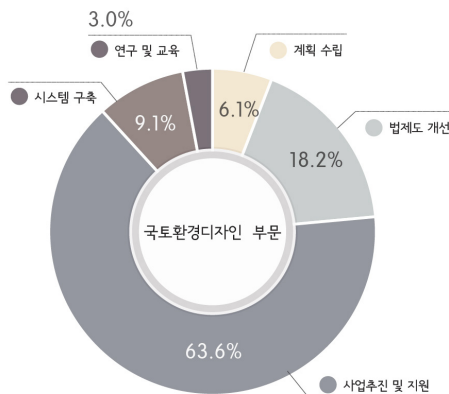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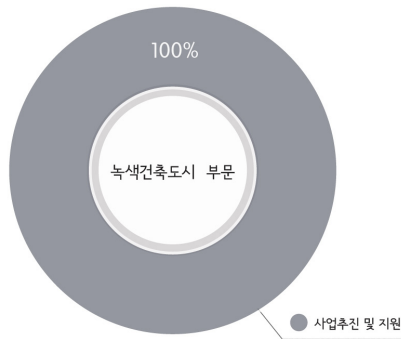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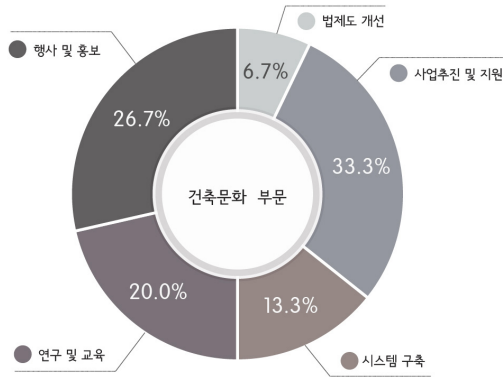
중앙부처 발표자료 24건 중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 해당하는 사업 및 시책이 13건(22.4%)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중점 발표하였으며, ‘행복주택 건설 위한 건축기준 특례 마련’,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등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다.

광역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발표자료 가장 중점적으로 발표된 부문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 해당하는 사업 및 시책으로 34건의 발표자료 중 20건(34.5%)으로 집계되며, 국토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시범도시 선정’ 관련 지자체별 자료가 중점 발표되었다.

주관부처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 부문	국토환경 디자인 부문	부문별 합계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5(8.6%)	5(8.6%)	13(22.4%)	23(39.7%)
문화체육관광부	1(1.7%)	—	—	1(1.7%)
합계 (중앙부처)	6(10.3%)	5(8.6%)	13(22.4%)	24(41.3%)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	—	2(3.4%)	2(3.4%)
경상남도	—	—	2(3.4%)	2(3.4%)
경상북도	1(1.7%)	—	1(1.7%)	2(3.4%)
광주광역시	—	—	2(3.4%)	2(3.4%)
부산광역시	2(3.4%)	—	3(5.2%)	5(8.6%)
서울특별시	2(3.4%)	2(3.4%)	4(6.9%)	8(13.8%)
울산광역시	—	1(1.7%)	1(1.7%)	2(3.4%)
인천광역시	2(3.4%)	1(1.7%)	—	3(5.2%)
전라남도	1(1.7%)	—	—	1(1.7%)
전라북도	—	—	1(1.7%)	1(1.7%)
충청남도	1(1.7%)	1(1.7%)	4(6.9%)	6(10.3%)
합계 (지방자치단체)	9(15.5%)	5(8.6%)	20(34.5%)	34(58.6%)
총 계	15(25.9%)	10(17.2%)	33(56.9%)	58(100%)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각 부문에 대한 세부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발표된 부문은 전체 발표자료 58건 중 33건(56.9%)의 정책 사업이 발표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으로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21건(36.2%),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 6건(10.3%), '시스템 구축' 분야 3건(5.2%), '계획수립' 분야 2건(3.4%), '연구 및 교육' 분야 1건(1.7%)의 정책 사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15건의 사업 및 시책에 대해 발표한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5건(8.6%),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4건(6.9%),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3건(5.2%),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2건(3.4%),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 1건(1.7%)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만 10건(17.2%)의 정책 사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2014년 4월 한 달간은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와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 건축·도시 관련 사업 및 시책에 대한 발표 자료가 36건(62.1%), 7건(12.1%)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밖에 '시스템 구축' 분야 5건(8.6%), '연구 및 교육' 분야와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각각 4건(8.9%), '계획 수립' 분야에서 2건(3.4%)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	2(3.4%)	2(3.4%)
법·제도 개선	1(1.7%)	—	6(10.3%)	7(12.1%)
사업추진 및 지원	5(8.6%)	10(17.2%)	21(36.2%)	36(62.1%)
시스템 구축	2(3.4%)	—	3(5.2%)	5(8.6%)
연구 및 교육	3(5.2%)	—	1(1.7%)	4(6.9%)
행사 및 홍보	4(6.9%)	—	—	4(6.9%)
총 합계	15(25.9%)	10(17.2%)	33(56.9%)	58(100%)

■ 세부분야별 정책동향



## ‘쉬엄쉬엄 산두리 산책’ 선두마을로 놀러오세요

주민들이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로 마을지도 제작

인천시는 강화군 선두마을에 대한 마을지도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두마을은 강화군 길상면 선두 4,5리 일원에 위치한 해안마을로서, 국토교통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경관형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12년 어판장 데크 광장을 완료한데 이어 2013년 ‘강화 나들이(8코스 철새보러가는길)’ 경관개선사업을 준공했다.

이번 선두리 마을지도 제작은 선두마을 홍보를 위한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계기로 착수됐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역사와 전설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기법을 적용하여 경관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기도 하고, 직접 마을역사 지명유래, 전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은 자료가 제법 수집되자 이를 경관전문가, 강화군, 인천시 담당 공무원, 마을 주민대표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에 제시했고, 협의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마을지도를 제작, 마을을 홍보하기로 결정했다.

마을지도에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인물이야기, 지형지물에 유래된 전설,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를 비롯한 마을 내 문화재 등 마을의 경관자원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으며, 경관사업으로 새 단장된 나들 길과 쉼터,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민박과 음식점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마을 주민들은 올해 4월 개최되는 마을 행사 때 마을지도를 배포하고, 강화 관광안내소 및 마을회관, 펜션 등에도 비치해 선두마을을 홍보하는 한편,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선두리 마을지도 제작은 경관사업이 단순히 경관개선효과만 가

져올 것이 아니라 관광활성화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다.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수용함으로써 주민의 활발한 활동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시·도의 경관사업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 산두리 마을지도

2014.04.01.

.....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추진단

## 인천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 운영

4.24일부터 8개 구 순회 무료 상담 통해 입주기간 분쟁 예방 및  
궁금증 해소

인천시는 각 구청 및 공동주택 단지의 협조를 받아 오는 4월 24일 중구를 시작으로 8개 구를 순회하면서 월 1회씩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주거유형별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6.10%



(779,394세대)이다. 이로 인한 공동생활의 갈등이 심해져 민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공동주택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운영과 관련해 민간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함으로써 생활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공동주택관리업무 무료 현장상담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14회에 걸쳐 입주민 227명의 궁금증을 해결해 줬다.

상담내용은 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회계처리, 업자선정, 관리규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민이 관할 구청 건축과에 상담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구별 순회 방문시 구청 또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상담사와 1:1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 상담에 참여하지 못한 신청자들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전문가와 장시간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입주민간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4.01

.....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 신진건축사들, 능력을 보여주세요!

「포항시 오천읍복지회관」 및 「수자원공사 대불정수장 환경개선사업」  
설계공모 2건 시행

국토교통부는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 발굴을 위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함께 신진건축사 대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지난 3월 충남개발공사의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건립사업에 이어, 2차로 포항시의 「오천읍민 복지회관 건립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대불정수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계공모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시가 추진하는 오천읍 복지회관은 지상 3층에 연면적 약 1,490㎡의 규모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대불정수장 환경개선사업은 연면적 약 1,362㎡(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기존 정수장 시설관리동의 내외부 환경개선을 통해 거주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공모일정 등 각각의 설계공모에 관한 상세 내용은 포항시(www.ipohang.org, 시정소식, 입찰정보) 및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http://www.kwater.or.kr, 입찰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LH 등 공공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등을 통한 정부의 신진건축사 육성의지 등을 담고 있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올해 6월 시행되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본 설계공모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4.09.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어린이 여러분을 건축창의교실에 초대합니다

국토부, 1박2일 건축창의교실(5.23.~5.24.)

참가 초등학생 120명 모집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새마을 중앙연수원(성남시 소재)에서 ‘건축창의교실’에 참가할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 1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우리 건축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축을 통한 창의력 개발을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사협회가 함께 추진한다.

행사에 참가할 학생은 창의적이고 참신한 그림을 제출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며, 4,30(수) 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행사 참가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4.03.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도시인문학 시민강좌 '서울: 숲에서 책을 만나다'

서울연구원은 4월부터 10월까지(매월 1회) 서울시 인재개발원 숲속 강의실에서 <서울: 숲에서 책을 만나다> 도시인문학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서울 시민과 함께 도시 인문학적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속에서 서울의 가치를 발굴하고 학문간 융합 과정을 통해 서울의 도시 인문학전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 ▶ 그래도 나는 서울이 좋다(오영욱, 4월16일)
- ▶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조한, 5월21일)
- ▶ 빨간 도시(서현, 6월 19일)
- ▶ 다시, 서울을 걷다(권기봉, 7월 16일)
- ▶ 서울 성 밖을 나서다(이현군, 8월 20일)
- ▶ 나의 운명 사용설명서(고미숙, 9월17일)
- ▶ 서울의 나무, 이야기를 새기다(오병훈, 10월15일)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은 “지난 해 숲속 강의에 이어 올해 도시 인문학강의 <서울: 숲에서 책을 만나다>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시간, 공간, 사람의 주제를 다룬 책을 만나기 위하여 기획하였다. 서울시민이 저자와 함께 인문학적 가치를 사유하고 학습하면서 우면산 솔밭 숲에서 자연의 여유로움을 즐기고 도시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캠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4.1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 밤이 아름다운 도시, 부산 탐방 함께 가요!

도시건축시민투어에서 야경투어 개최

부산시는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주관으로 시민의 도시·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해 매년 6차례 진행해오고 있는 '부산 도시건축시민투어'의 첫 프로그램으로 '야경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19일 진행되는 '제23차 부산도시건축시민투어(이하 건축투어)'는 시민 3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밤이 아름다운 도시, 부산'을 주제로 부산의 야경 탐방을 실시한다.

'건축투어'는 오후 6시 부산역 광장 분수대 앞에 집결해 걸어서 초량 이바구길인 담장갤러리, 168계단, 김민부 전망대, 당산을 거쳐 올라가 초량산복도로에서 내려다보이는 부산항의 석양과 황령산 봉수대에서 보이는 부산 전역의 야경을 함께 감상하고, 광안리 해변으로 이동해 광안리 야간조명쇼를 관람 하는 일정이다.

초량 산복도로의 해설은 김상진 건축가(건축사사무소 가현)가 맡아 초량 산복도로 일대의 도시·건축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며, 황령산 봉수대 야경과 광안리 야간조명쇼는 고기영 비즈로 대표(광안대교 경관조명 설계자)가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안리 야간조명쇼'는 지난해 말 시에서 1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롭게 경관조명을 설치한 것으로, 매일 밤마다 다양한 음악과 함께 특색 있는 연출로 운영되고 있어 부산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명물이다. 야경투어는 '광안리 야간조명쇼' 관람을 끝으로 오후 9시 30분경 광안리 해변에서 마무리 될 예정이다.

2014.04.09.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실

## ‘바로 활용’ 하는 ‘국가인터넷지도’ 선보인다 올해 말부터 제공 ...중소·개인 ‘공간정보 창업’ 파란불

앞으로는 국가기본도를 별도의 가공 작업 없이 인터넷 등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각종 공공분야의 공간정보시스템, 포털지도 등에서 이용이 가능한 국가인터넷지도를 구축하고 올해 말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가인터넷지도는 데이터 제공 방법, 표현 내용, 갱신 주기 등을 다양화하여 민간 포털지도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중소·개인 기업 등은 기존 포털지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가인터넷지도에 표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도 이용을 위하여 다국어(일·영·중문) 버전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며, 색각이상자 및 저시력자도 국가인터넷지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색상과 해상도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도로, 건물 등 일반적인 지도정보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사회복지(응급실, 야간진료), 안전(대피소, 인명구조), 교통(사고다발지역) 등 공익적인 내용을 확대하고, 더불어 매주 갱신되는 국가기본도와 연계하여 최신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국가인터넷지도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서 국가기본도를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환 및 가공 작업을 해야만 했으나, 이번 국가인터넷지도 구축으로 누구나 손쉽게 비용 부담 없이 국가기본도를 인터넷 등에서 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는 지도 구축·갱신으로 소요되는 약 3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지도(구글지도 등)를 사용 중인 민간

기업은 국가인터넷지도를 이용하여 연간 사용료 약 12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 포털지도도 지도 수정 등에 최신 국가인터넷지도를 활용함으로써 지도갱신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앞으로도 국가인터넷지도를 북한지역까지 확대 구축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국가인터넷지도 개념

2014.04.10.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한옥건축박람회, 젊은 층 타깃 재미있게 바뀐다 10월 30일부터 영암서 ‘한옥, 그 오래된 미래’ 주제로 개최

전라남도도와 영암군이 오는 10월 말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회 한옥건축박람회의 주제를 ‘한옥, 그 오래된 미래’로 결정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에서 결정한 주제 ‘한옥, 그 오래된 미래’는 한옥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건축 양식으로서도 우수성을 뽐낼 수 있는 주제로 박람회의 외연을 확

장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부제로 선정된 ‘전원생활, 한옥에서 답을 찾다’는 현실적이며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이미지를 강력히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한옥에 관심이 적은 젊은 층을 겨냥해 맞춤형 부제로 ‘한옥스캔들’을 별도로 정해 젊은 층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와 영암군은 지난 1월 영암군청 낭산실에서 제 4회 한옥건축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박람회 장소와 명칭은 그대로 두되, 지난해 운영했던 프로그램은 50% 이상을 교체한다는 원칙 아래 관람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슈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특히 지난 2월 전문가와 공무원 등 8명으로 박람회 워킹그룹을 구성해 격주 단위로 토론을 실시,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주제도 워킹그룹 토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한옥건축박람회추진위원회는 올해 한옥건축박람회장을 최근 박람회의 전시 경향을 반영해 영상 위주로 꾸며 관람객이 쉽게 박람회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구들 시연, 온돌캠프 운영 등 한옥 관련 체험형 전시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며, 초·중·고·대학생, 가족단위 등 폭넓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한옥관련 공모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옥건축박람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기업·단체의 후원·협찬을 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키로 했으며 추진위원들부터 앞장서 재능을 기부하기로 결의했다.

조용준 한옥건축박람회추진위원장은 “올해 박람회는 전남도, 영암군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준비에 나서 어린이와 젊은 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도 개발 중”이라며 “목표 관람객 13만 명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어르신부터 젊은 층까지 한옥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04.12

..... 전남도청 행복마을과

## ‘한양도성의 모든 것 다 있다’, 한양도성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 한양도성 홈페이지 전면 개편

서울시는 4월 「한양도성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기존의 홈페이지는 단순히 한양도성 순성을 안내하는 역할에 그쳤으나 이번 홈페이지는 한양도성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뿐만 아니라, 시민 신고방, 토론광장, 순성사진 및 후기 게시판, 공동체방 등 시민참여 코너를 대폭 확충하였다.

#### ○ 걷고, 듣고, 보면서 알아가는 한양도성 순성·체험정보 제공

한양도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걷고 들으며 직접 한양도성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양도성 가이드북 및 지도 제작과 함께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순성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다.

#### ○ 우리 모두의 유산, 한양도성을 함께 지켜가는 활동 공간제공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 무엇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한양도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 성곽마을공동체·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공간을 대폭 늘기는 것이다. 「순성안내」 코너의 ‘시민 신고방’, 「소식·나눔」코너의 ‘토론광장’, ‘순성사진 게시판’과 ‘순성후기 게시판’, ‘공동체방’ 등이 마련되었다.



## ○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홈페이지, 가치를 더하는 한양도성

서울시는 이번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시민들이 한양도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한양도성 보존·체험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양도성 홈페이지 메인

2014.04.14.

.....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 ‘해방 이후 독도’ 역사와 지리정보를 한자리에서!

4.14. 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독도 지리정보 특별전’ 개최

독도지형도, 지명, 항공사진, 3D지도, 지리지 등 해방이후 독도 관련 지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독도 지리정보 특별전’이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하여, 영토 주권의 상징인 지도를 전시하는 특별전을 4월 14일 개관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광복이후 우리 정부가 직접 측량하여 제작한 독도 지도와 항공사진, 지리지, 사진자료 등이 전시된다.

그동안 관련 기관·박물관 등에서 독도 고(古)지도와 역사에 대한 전시회는 자주 개최되었지만, 해방 이후 우리정부가 제작한 독도 지도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1961년 “독도를 정확히 측량하여 대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박정희 전대통령(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천문측량으로 1962년도에 제작된 1/3,000 축척의 독도지형도는 물론, 연대별로 촬영한 항공사진, 3D지도, 지명 및 사진, 지리지 등 45점이 전시된다.

한편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독도 지리정보 특별전’ 개관 주간(4.14.~4.18.)에 방문하는 관람객(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우리 영토와 바다’ 고지도 도록을 무료 배포한다.

‘우리 영토와 바다’ 고지도 도록에는 독도·동해를 우리영토로 표기한 외국 고지도 86점과 논문 등이 수록되어 있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자료이다.

‘우리 영토와 바다’ 고지도 도록은 지도박물관 홈페이지(www.ngii.go.kr/map) 자료실에 PDF 파일로 게시되어 있어 언제든지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독도 지리정보 특별전’ 전시실

2014.04.14.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간이역, 시외버스터미널 및 유희 공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

2014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 6개 지역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거나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희 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2014년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로 몽탄역 등 간이역 1개소, 황간버스터미널 등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 (구)광주극장 관사 등 유희 공간 3개소 등, 총 6개 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 2014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대상지

구분	대상지
간이역	전남 무안 몽탄역
시외버스터미널	강원 정선 시외버스터미널 충북 영동 황간버스터미널
유희공간	제주 추자도 어촌계 냉동창고 충북충주 (구) 여성회관 광주 (구)광주극장 관사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은 문체부가 지난 '11년부터 시설 개선 중심의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와 디자인을 결합하여 소규모 간이역, 유희 공간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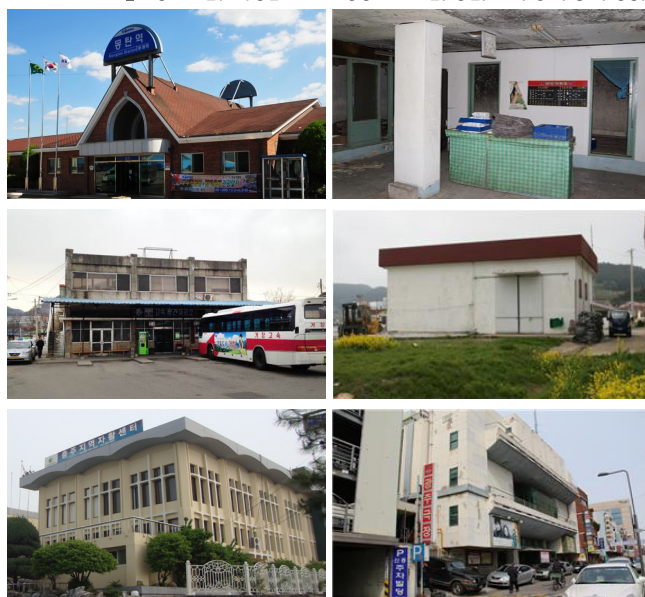
올해는 기존에 지원했던 간이역, 유희 공간 외에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사업 대상 범위를 넓혔으며,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여 문화 기획자, 디자이너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지역 및 공간의 잠재력과 지역 주민의 활용 가능성, 지역 문화예술단체 연계성 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에는 대상 공간을 지역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아울러 개선된 공간 안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특히 대상 공간이 지역민을 위한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가, 디자이너, 문화기획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사업평가 단계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분야별로 전문적 컨설팅을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거나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희 공간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적 공간으로 재활용하여 이를 우수사례로 확산시켜 나가고,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및 소통 공간으로 활성화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누려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대상지 사진(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무안, 정선, 제주, 광주, 충주, 영동)



2014.04.18.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앱다운로드 한 번으로 온나라부동산포털이 내 손에 쏙! 카메라 증강현실 및 로드뷰·스카이뷰 분양정보 서비스 개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모아놓은 온나라부동산포털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선보임과 아울러 모바일 웹 서비스에 지도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 ○ 온나라부동산포털 앱 신규 제공

이번에 신규로 제공되는 온나라부동산포털 앱은, 온나라부동산포털 사용자들의 설문을 통하여 실거래가, 분양정보 등 가장 관심 있고 자주 찾게 되는 정보 위주로 부동산 정보검색, 카메라 증강현실, 분양정보, 부동산 계산기, 부동산 거래절차로 구성하였다.

특히 카메라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을 설정하여 주변의 부동산 현황을 볼 수 있어, 원하는 지점에서 빠르게 부동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 모바일 웹(m.onnara.go.kr) 서비스 개선

지도서비스와 함께 분양정보와 부동산 개발정보를 추가하여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특히 이 정보들은 모바일에서는 혁신적으로, 일반지도, 로드뷰, 스카이뷰 3가지 형태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첫 화면을 아이콘형태로 변경하여 가시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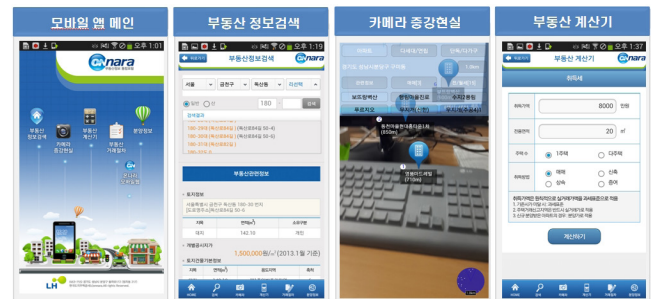
### ○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 검색기능 추가

온나라부동산포털내의 다량의 정보를 빠르고 다양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추가 하여 한 번의 검색을 통해 카테고리별로 관련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외국민과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중국어·일본어 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온나라부

동산포털의 서비스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각국의 언어로 자막처리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구성되어, 대한민국 부동산 또는 포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 공공기관 등에 온나라부동산포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나라부동산포털의 개선된 서비스는 4월 21일부터 제공되며, 모바일앱의 이용은 안드로이드는 T스토어에서,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가능하다.



■ 모바일 앱 서비스화면

2014.04.20.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LH 공간정보처

## 충북 '2014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 2개소 선정 영동 황간버스터미널과 충주 여성회관 사업 수행 계획

충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14년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에 '충주시'와 '영동군' 2개소가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동 황간버스터미널은 '시간이 머무는 자리', 충주는 '(구)여성회관 소통형 문화플랫폼 프로젝트'의 사업명으로 이번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간이역, 버스터미널, 유희 공간 등에 문화와 디자인을 결합해 생활 속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개선 중심



의 하드웨어적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은 전국 12개 지자체가 응모, 서류 및 현장평가 등 총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6개소가 선정됐다.

사업선정지역은 영동 황간버스터미널, 충주 (구)여성회관을 비롯해, 무안 몽탄역, 강원 정선 정선시외버스터미널, 제주 추자도 어촌계 냉동 창고, 광주 (구)광주극장 관사 총 6곳이며,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공간의 잠재력과 지역주민의 활용 가능성, 지역 문화예술단체 연계성 등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사업이 선정된 ‘영동군’과 ‘충주시’는 지역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리모델링이 지원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사업평가 단계부터 완료까지 컨설팅을 해줄 예정이다.

또한, 개선된 공간 안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될 계획이다.

고규식 건축문화과장은 “지역의 낙후되고 침체된 공간이 디자인을 통해 지역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번 사업을 계기로 충북에 디자인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21.

충청북도 공보관

## 부산시, 근현대 역사문화자산 보존 및 활용- 구)한국은행 부산본부 취득 절차 본격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통과...근현대 역사박물관으로  
활용

부산시가 공개매각 절차 중에 있는 중구 대청동 한국은행 부산본

부 옛 건물과 토지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부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부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후 4월 23일 개최된 부산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 부산본부 옛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하고, 구체적인 매입시기와 매입금액은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부산시는 해당 자산 취득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게 됐으며, 매입 후에는 한국은행 부산본부 옛 건물을 부산 개항기의 역사·문화 및 부산의 경제사·생활사 관련 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제 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조명하는 근대역사관과 한국전쟁 전후 부산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임시수도기념관, 그리고 주변의 근현대 문화자원을 통합·연결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근현대 역사문화시설로 활용해 관광객들과 부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은행 부산본부 옛 건물은 역사적 의미와 건축사적인 보존 가치가 높아 지난해 9월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제70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부산본부 옛 건물은 재건축 및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리모델링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보수·정비, 구조 변경 없는 리모델링, 외관의 변경 및 도색 등을 포함해 원형(현재 상태)을 변경하는 사소한 사항까지도 사전에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인위적인 건물의 변경이나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



■ 구)한국은행 부산본부 청사 사진

2014.04.24.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우리동네 골목길에 이야기벽화 있어요

영주시,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벽화사업 추진

영주시는 2014년 여성친화사업으로 추억이 있는 골목, 아름다운 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주택가 골목길 벽화사업을 오는 5월까지 추진한다.

영주시 명륜길 6 일대의 벽화사업은 옛 추억이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향교골 이야기와 사계절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벽화 길을 조성해 시민들의 지역 공동체 의식 향상과 행복을 주는 환경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명륜길은 영주향교가 자리하고 있고, 영주여자고등학교 등곳길이며, 지역의 향토음식점 요선제가 있는 골목길로 벽화거리 조성의 최적지이다.

사업 첫 구간에는 현재 동네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언덕 위 하얀 집을 벽화로 배치했으며, 구간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된 모습과 여학생들의 등교 모습, 한옥의 솟을대문, 인기 연예인 인물화와 함께하는 포토 존 구간으로 구성해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 벽화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도시 발전과 시정 추진 전반에 걸쳐, 성인

지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은 물론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벽화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꿈꾸는 행복도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벽화거리 모습

2014.04.30.

..... 경상북도

## 해외건설, 양적성장과 질적 내실화 병행추진

「2014년 추진계획」 14년도 해외건설 정책지원방안 확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 700억 불을 달성하는 등 우리 기업 해외건설사업 수주기회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지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등 해외건설의 질적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을 3월 26일 해외건설진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4월 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에서는 ①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②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 지원, ③ 중소·중견기업 진출 확대, ④ 진출 시장·공종 다변화, ⑤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올해 5대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수주확대라는 양적 성장과 수익성을 높이는 산업의 질적 내실화를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 2014년도 해외건설정책 추진방향

◆ '14년 700억 불 수주달성, '17년까지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 양적성장(수주확대)과 함께 질적 성장(수익성제고) 병행	
①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①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활성화 지원 ② 중소·중견기업 이행성보증 지원 강화 ③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력 강화 등
②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지원	④ 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지원 강화 ⑤ 개발협력력을 통한 우리기업 수주기회 확대 ⑥ 해외건설에 특화된 R&D 추진
③ 중소·중견기업 진출 확대	⑦ 독자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의 원도급 진출 확대 ⑧ 동반진출을 통한 역량부족 기업의 진출강화
④ 시장·공종 다변화	⑨ 맞춤형 수주전략 및 진출시장 다변화 지원 강화 ⑩ 파급효과 큰 메가·복합 프로젝트·공종 진출 확대 ⑪ 건설 eng. 해외진출 활성화
⑤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⑫ 해외건설 Think-Tank 강화, 지원조직 연계 ⑬ 해외건설 상징 브랜드(슬로건) 홍보 강화 ⑭ 제 3차 해외건설진흥계획(15~19년) 수립

## ①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투자개발형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펀드(GIF)를 공공주도펀드로 확대·개편하고, 중소·중견기업 이행성 보증을 위해 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서 발급을 확대(정책금융→시중은행)한다.

아울러,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강화를 위해 제 3국 공동투자를 위한 사업발굴을 강화하고, 해외 민간투자사업 협력포럼('14.9.)도 개최한다.

## ② 해외건설산업 수익성 제고 지원

해외건설기업의 사업리스크 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지역별 진출 전략과 해외진출 리스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간 개발협력력을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을 강화하고, 고위급 초청연수도 확대하며 해외건설 맞춤형 R&D도 추진한다.

## ③ 중소·중견기업 진출 확대

독자적 역량을 갖춘 기업의 원도급 진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해외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정보·금융·외교력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진출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대기업 동반진출, 인력양성과 현장훈련을 지원하고, 해외건설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도입한다.

## ④ 진출 시장·공종 다변화

주요국에 대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타겟형 수주지원단 연중파견(8회)하는 등 외교적 지원은 강화하면서 진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개척자금 타당성조사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전후방 연계·파급효과가 큰 도시, 국토정보, 공항, 도로, 수자원분야 등 메가·복합 프로젝트 및 공종진출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 ⑤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14.2월 개소, 해외건설협회)는 기존센터와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8.28대책을 통해 마련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를 통해서도 정부 내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해외건설 상징브랜드를 발표하여 체계적 홍보를 지원하고, 중장기 해외건설 진흥방안 마련을 위해 제 3차 해외건설진흥계획('15~'19년)도 준비한다.

2014.04.03.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을 물 절약형으로 만든다

### 인천시, 신축건축물 절수설비 설치 표준운영절차 마련

인천시는 4월부터 신축건축물 절수설비 설치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해 모든 신축건축물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축건축물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적용과정에서 각 군·구마다 상이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업무효율 저하는 물론 관련 민원의 불편과 혼선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표준운영절차 마련을 통해 건축허가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절수설비 설치를 안내하고, 사용 승인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일관된 체계를 갖추으로써 기준에 맞지 않은 절수설비가 설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물수요 관리를 공급단계, 사용단계, 재이용단계 등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공급단계에서는 누수 등 유수율 관리를 진행하고, 사용단계에서는 신축건축물, 공공시설, 숙박·목욕장업 등에 대해 절수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는 한편, 재이용단계에서

는 빗물재이용, 하수재이용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을 기준으로 인천시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297L로서 10년 전에 비해서는 15L감소했으나, 특·광역시 평균 사용량 277L과 비교하면 매일 약 20L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도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도쿄 200~250L, 뉴욕·런던·상하이 등이 100~200L 수준임을 감안하면 인천시민 1인당 물소비량은 이들 도시에 비해 2~3배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의 합리적 이용은 선진도시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다. 인천시가 세계주요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물 절약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표준운영절차 마련을 통해 연간 5,000여 개소에 달하는 모든 신축건축물을 물 절약형으로 건축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물절약전문기업(WASCO)의 투자를 통해 절수설비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물 절약 운동을 펼쳐 2020년까지 현 사용량의 10%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축건축물 절수설비 설치 표준운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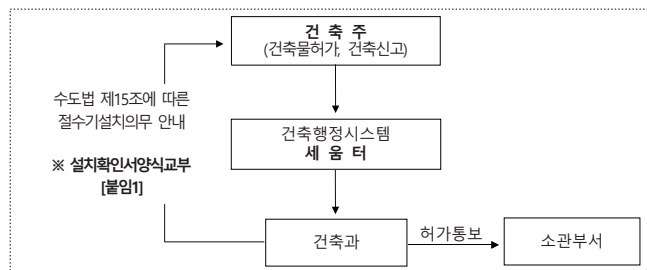
#### [허가단계]

○ 건축과 : 허가, 신고 수리시 절수기 설치 의무화 안내, 사용승인시 「절수설비설치확인서」 첨부 하도록 안내

○ 소관부서 : 대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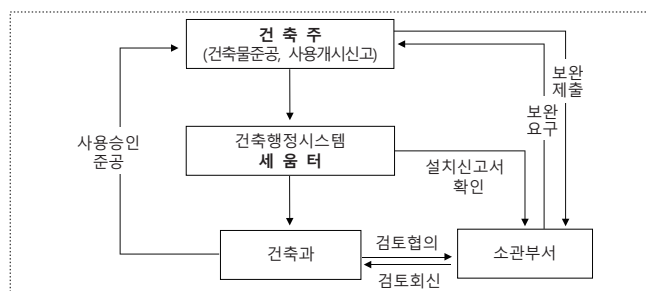
(※ 소관부서 : 중구-환경관리과, 동구-환경보전과, 남구-환경보전과, 연수구-환경보전과, 남동구-환경보전과, 부평구-환경보전과, 계양구-환경과, 서구-환경보전과, 강화군-도로과, 옹진군-환경녹지과)

# 녹색건축도시 부문



## [사용승인 단계]

- 건축과 : 소관부서 검토협의
- 소관부서 :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검토, 보완요구, 검토회신



2014.04.10.

.....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 수질보전하천과

## 도내 신재생에너지 주택 519가구 짓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15개 마을 선정...25일까지 2차 모집

충남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의 그린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마을 단위 지원) 공모'에 도내 15개 마을 519가구가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최소 행정구역 단위(리, 동)의 10

가구 이상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을 대상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정부에서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하며, 도와 시·군에서는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1일까지 접수된 1차신청분 가운데서 15개 마을 519가구가 이번에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2차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한 후 가능하며, 지원금 신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청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2014.04.10.

..... 충남도청 전략사업과

## 울산시,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든다.

UN ISDR에 캠페인 가입 신청서 제출

울산시가 UN이 펼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글로벌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 10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승인은 UN ISDR 대표가 서명한 승인서를 받으면 캠페인 동참이 공식화된다.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는 도시 스스로 재해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목적으로 UN ISDR(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이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개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4개, 중국 7개, 일본 5개 도시를 비롯한 101개국 1,706



개 도시에서 가입했다. 국내에서는 서울, 인천, 대전, 경북 등 57개(광역시 7, 기초 50) 지자체가 가입 승인서를 받았다.

캠페인에 참여하면 UN으로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경감 기법 및 매뉴얼을 지원받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UN ISDR이 제시하는 10가지 필수이행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가입 3년 뒤에는 그간의 필수이행사항 실천 및 활동내용을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방재안전도시(Resilient City)'로 인증 받게 된다.

울산시는 캠페인 가입을 계기로 재해경감 예산편성, 도시 재해복원력 강화, 재해경감 시설투자, 생태계와 자연적 완충제 보호, 긴급사태 관리 역량 강화, 주민 요구 중심 재건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대응능력 강화 등 재해예방을 위한 10개 필수 사항을 강화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ISDR은 지구온난화 등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해의 빈발에 따라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을 위해 UN 사무국 내에 설립된 기구로, 2010년부터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My City is getting ready)'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14.04.11.

..... 울산광역시 안전총괄과

## 내년도 건설업계 해외진출 '정부지원' 시작됐다!

### 인프라 마스터 플랜·고위공무원 초청연수 '15년 사업 공모 4.16.(수)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정부 대 정부(GtoG)간 개발협력을 통한 新시장 개척 및 건설업계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5년도 인프라 마스터 플랜 수립과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시장수요에 기반을 둔 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업계 및 공공기관 등

으로부터 마스터 플랜 사업제안 및 해외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대상자 제안을 접수받고('14.4.14.~5.2. 3주간), 건설업계·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5년도 사업설명회를 4.16.(수) 오전 10시 K-water 수도권 지역본부 대회의실(과천) 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마스터 플랜과 초청연수사업의 '15년도 계획 및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특히 마스터 플랜 대상사업 및 초청연수 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대상사업 및 연수자 요건, 제안서 및 추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15년부터는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국토부 마스터 플랜 및 초청연수사업 등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ODA절차를 준용하고 종전 해외건설중점협력국(15개국)에서 ODA 중점협력국(26개국)으로 중점지원대상도 확대되므로, 이런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제안서 작성 및 연수대상자를 추천하면 된다.

#### ■ ODA 중점협력국 현황 (26개국)

아시아(12): 베트남, 솔로몬군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스리랑카,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동티모르

중동(2):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4):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파라과이

아프리카(8): 가나, DR콩고,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우간다, 카메룬, 모잠비크, 르완다

인프라 마스터 플랜 사업은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도시, 교통, 수자원 등의 마스터 플랜을 개발대상국에 수립해 주고 후속 수익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사업수행 시 기술·금융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3년에 3건, '14년에 7건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15년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 〈13년도 마스터 플랜(M/P) 사업〉

- 나이지리아 라고스 광역교통, 미얀마 에아와디강 유역 수자원, 인도 뭄바이 도시재생 마스터 플랜 등 3건

## 〈14년도 마스터 플랜(M/P) 사업〉

- 르완다 키갈리 공항부지 개발, 칠레 토지정보 인프라, 모잠비크 간선도로망, 니카라과 국가도로망, 태국 동부 연안 물 관리, 인도네시아 페칸바루 상수도, 베트남 후에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등 7건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은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의 인프라 분야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 인프라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하고 우리기업에 해당 고위 인사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3년에 17개국·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74명이 참석하였고, '14년도는 주한공관원까지 확대하여 총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업체와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마스터 플랜 대상사업과 초청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만큼, 업계의 해외 진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2014.04.13.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해외건설 新시장 진출, 정부지원과 함께 출발!

시장개척비용 최대 90%지원,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들에 올해 시장개척자금 약 38억 원을 지원한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新시장개척비용을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것으로, 업체의 타당성조사비용, 출장경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지원규모<sup>1</sup> 및 지원비율<sup>2</sup>을 상

<sup>1</sup> (지원규모) 최대 2억 원 → 3억 원

<sup>2</sup> (지원비율) 중소기업 최대 80%→90%, 중견기업 최대 50%→80%

향조정하기로 하였다.

세부 지원내역(88개사, 78건 38억 원)을 살펴보면, 업체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60건 25억 원, 중견기업에 18건 13억 원을 지원하고, 진출지역별로는 아시아에 43건 20억 원, 중동에 16건 6억 원, 중남미에 9건 7억 원, 아프리카에 8건 5억 원, 기타 2건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사업별로는 타당성조사에 21건 21억 원, 현지교섭 55건, 17억 원, 발주처 초청 2건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규모는 전년 1차 지원 24억 원에 비해 58%나 증가한 것으로, 그동안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목마름을 느끼던 건설업체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당 평균 지원 금액은 타당성조사 98백만 원/건으로 전년대비 23% 증가, 현지교섭 31백만 원/건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여 그동안 지원현실화를 바라던 업계 수요에 한 발자국 다가섰다.

특히, 올해부터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현지에서의 교통량조사, 지반조사, 측량 등에 소요되는 ‘현지조사비’를 지원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장개척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2014.04.14.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 빛물을 가두어 두는 도시매뉴얼 나왔다

빛물저류공원 매뉴얼 제작·배포, 도로, 건물, 하천에도 활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에 의한 도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을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에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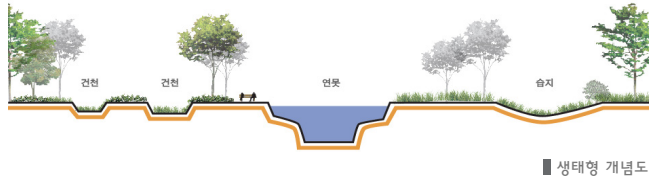
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북은 기존의 공원 지하에 대형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집중식 관리방식 외에 다양한 공원 종류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설치 가능한 분산식 관리방식을 중점



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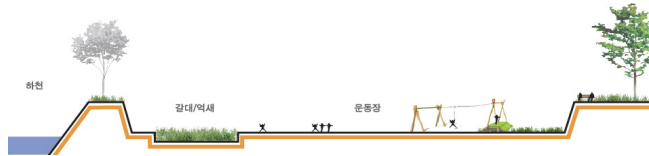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에서는 생태형, 운동시설형, 식생 피복형, 지하매설형, 복합형의 5가지 유형의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 모델을 제시하였다.

① **생태형** : 연못 등 저류 능력이 있는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산책로 및 벤치 등의 휴게시설 위주로 조성하는 자연형 공원에 적합한 유형



■ 생태형 개념도

② **운동시설형** : 저류가 가능한 지형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운동시설, 편의시설(벤치 등) 등의 많은 시설을 설치하는 조성형 공원에 적합한 유형



■ 운동시설형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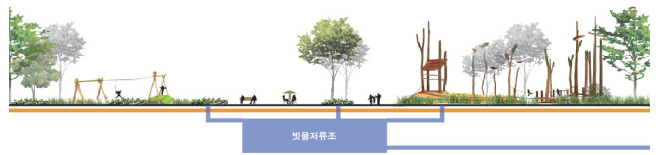
③ **식생피복형** : 운동시설형과 같이 지형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나 별도의 시설 조성 없이 단순히 식생을 피복하는 유형



■ 식생피복형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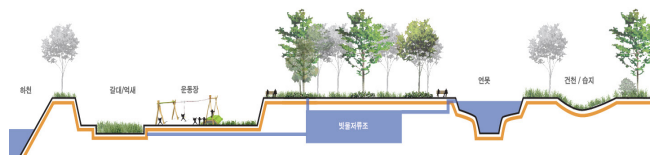
④ **지하매설형** :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형

상 상기 3개 유형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저류 능력을 갖추는 유형



■ 지하매설형 개념도

⑤ **복합형** : 상기 4개 유형 중 2개 이상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유형



■ 복합형 개념도

또한, 공원형으로 제시한 5개 유형 외에 주택가, 녹지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빗물저류 시설 12가지<sup>3)</sup>를 제시하고 있다.

본 가이드북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http://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http://www.kict.re.kr))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2014.04.15.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서울시, 건설산업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공사실적증명 발급 처리

서울시는 민원서비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방문 없는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해 건설산업정보센터와 ‘건설산업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4.25.(금) 체결한다고 밝혔다.

<sup>3)</sup> 식생수로, 침투도랑, 식생여과대, 빗물정원, 옥상녹화, 우수지, 지하저류조, 인공습지, 투수성 포장, 보수성포장, 수변완충대, 빗물연못 등 12가지 유형에 대하여 목적·적용방법·고려사항·설계기준 제시



건설정보산업센터는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건설산업 관련 정보시스템 연구개발 등 건설산업 정보의 원활한 유통·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재단법인이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정보 공동 활용으로 각종 사업 추진 △건설 산업의 생산성, 공정성, 투명성과 건설안전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건설산업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 △기타 건설산업정보와 관련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이다.

우선 올 7월부터는 ‘건설공사 기성 실적증명’을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직접 공공기관(발주기관)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와 건설산업정보센터 ‘KISCON(키스콘)’이 연계됨으로써 키스콘(www.kiscon.net)에서 공사실적발급을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의 공사실적 승인으로 기관방문 없이 원클릭으로 공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서비스의 혁신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서류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과 민원처리 기한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토석(사토, 순성토)의 반출입정보를 제공하여 자원을 재활용하는 서울특별시 흙은행시스템(soilbank.seoul.go.kr)과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을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을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서비스된다.

더불어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의 하도급 대금지급정보를 건설정보산업센터와 공유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온라인으로 건설공사 대장에 대금지급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절차를 없애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건설업체에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인 관리로 건설IT행정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건설정보산업센터가 운영하는 키스콘의 건설업체의 기본정보,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 건설산업정보 연계로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도환 건설산업정보센터장은 “서울시와 건설산업정보의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정보의 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와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산업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건설공사관리로 시민행복증진에 한층 더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4.25.

..... 서울특별시 건설총괄부

## G밸리 94개 건물 ‘에너지 사용 10% 줄이기’ 나선다

‘G밸리’로 불리는 금천구, 구로구 일대 약 60만평(198만 1,522㎡) 면적에 위치한 서울디지털단지 94개 건물(1만 1천여 개 업체)이 에너지 사용량 10% 줄이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표적 빌딩집약형 단지이자 시내 산업단지 중 전기소비가 가장 많은 서울디지털단지에서 에너지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에너지 사용량을 10%만 줄여도 연간 전기소비량 59GWh,

금액으로는 매년 53억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2만 7천t CO<sub>2</sub>를 감축하는 것으로 이는 30년생 소나무 4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환경적 효과가 있다.

전기·전자, 정보통신, 비제조 등 1만 1천여 개 업체가 촘촘하게 밀집한 서울디지털단지의 계약전력은 총 41만 1,400kW로 원전 1기 용량(100만kW)의 40%가 넘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서울디지털단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연간 10% 줄인다는 목표로 △G밸리산업협회 △에너지관리공단 △강남도시가스 △금천구청과 협력해 올 한 해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고 28일(월) 밝혔다. 작년 7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우선, 시에서 건물별로 에너지 컨설팅을 실시해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소비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먼저 찾아내면 업체들은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의 일반조명 LED로 교체 △최대전력 관리 장치 설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개별 업체별 에너지 효율개선 등을 자발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BRP 용자지원 한도 100%로 늘려 20억 원 한도 내에서 초기 사업비 전액 지원

특히 서울시는 이와 같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에 드는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 용자지원 한도를 이달부터 기존 80%에서 100%로 늘려 초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며, 용자 상한선은 최대 20억 원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개인자금 투입 없이 BRP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평소 에너지효율개선에 관심은 있었지만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건물과 주택 소유주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물부문 최소 지원 금액이 기존 1천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완화돼 상가 임차인, 집합건물 개별 분양주 등 소액 사업자에 대한 지원 폭이 넓어졌다.

BRP 사업비 용자지원을 받으려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뉴스·소식 ▶고시·공고 ▶2014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용자지원 개선계획에서 자세한 용자규모와 신청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있는 만큼 관할 세무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본격적인 서울디지털단지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에 앞서 지난 4일(금) 입주 건물 대표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산동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세미나를 열고 에너지 특화형 서울디지털단지 추진단 발대식도 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에너지관리공단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활성화 방안, 에너지 효율개선 실증사례 등에 관한 발표를 통해 입주 건물 대표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12년 9월 약 3,300만원을 들여 지하주차장 일반전등 1,460개를 LED조명으로 교체해 연간 전기사용량 352,542 kWh, 관리비 3,173만원을 줄인 대룡포스트타워5차의 사례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2014.04.27.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 정부, '우수 중소·중견건설업체' 해외진출 집중 지원!

신청접수(5.1.~5.23.) ... 6월중 우수기업 지정,  
시장개척·현장훈련(OJT) 우대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경기 침체 속에서 중소·중견 건설기업들도 해외건설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정보 입수, 금융조달·보증발급, 전문인력 확보 등에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는 '94년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으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중소기업체 수주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우수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공사 수주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업체와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체로 한정한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해외시장개척 추진의지를 가진 해외건설업자로 신고한 자(「해외건설촉진법」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이며, 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24일간으로 신청서 마감이후 서류심사, 해외건설진흥위원회 등을 거쳐 6월 중 결과가 발표된다.

희망업체는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02-3406-1105, 1109)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로 문의가 가능하다.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

보·금융·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시장개척 지원사업, 현장훈련(OJT) 등에 지원 우대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우수업자 선정정보가 제공되고 해외건설 브랜드가 마련되면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도 추진된다.

아울러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 수수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외공사 보증한도 확대 및 수수료 인하, 금리우대 등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14.04.29.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서울형 도시공간정보 구축사업’ 청년 78인 활동 시작

서울형 뉴딜일자리인 ‘서울형 도시공간정보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78인이 1일(화)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실내 공간정보와 실외 도시시설물 위치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IT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돼 소방 및 방재 안전시설, 재난 시 긴급구조, 시설물 관리 등에 활용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올해 ‘서울시 도시공간정보 구축사업’은 △3차원 실내 공간 모델링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두 분야로 진행된다.

‘3차원 실내 공간 모델링’은 복잡한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를 실제와 같은 3차원 실내지도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올해 한 50명이 활동한다.

‘도시시설물 위치좌표’는 지면 중심으로 관리하던 비상소화장치, CCTV등 주요 도시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전국 최초로 위치좌표를 이용한 지점 중심으로 구축해 국가 기본도인 수치지도에 포함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교육부터 성과물 관리까지 민간기업 다수가 참여하는 민·관 협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 3.0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도시공간정보 구축부터 활용까지 전 분야를 서울시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발전시켜 향후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봉연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은 “‘서울형 도시공간정보 구축사업’은 참여자에게는 일자리를, 민간업체에게는 구축된 DB 공유훈을 통해 다양한 활용·응용서비스 개발 기반조성을 마련하는 민·관협업 사업”이라며 “공간정보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속 발전시켜 취업난에 불안해하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 확대에 도움이 되

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4.02.

..... 서울시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 주거용 불법건축물 올해 한시적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2월 16일까지 신청해야

광주광역시시는 건축법을 위반한지 1년 이상이 됐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 규모는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건축물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다.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다만,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고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 강제 이행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건축주는 오는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건축허가권자인 각 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건축허가권자는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광주시는 각 자치구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달 말까지 동구 2건, 남구 6건 등 8건이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처리됐다. 서구 2건, 남구 8건 등 10건은 현재 신고 접수돼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용 승인될 예정이다.

2014.04.01.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디자인으로 범죄 예방... 셉테드 시범사업 실시

골목길 조명 확충, 담장 개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설계부터 준공까지 '디자인자문관' 투입... 완성도, 효과성 높여

경기도는 4월부터 디자인을 통해 취약지역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구도심,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담장, 방치된 공터 등 취약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주민에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이다.

이번 셉테드 시범사업 지역은 안양시와 고양시 뉴타운사업 해제구역 등 2곳이며, 4월부터 전문가 자문 및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쳐 7월 착공, 연말 준공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골목길 조명 확충, 투명 담장 개선 설치, 자연 감시 역할을 할 커뮤니티 공간 마련, 체육·휴게시설, 방범용 CCTV 설치 등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특히 설계부터 준공까지 도에서 지정한 디자인자문관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효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도, 시군, 공공기관이 지원 또는 시행하는 건축, 공간조성, 도심재개발 및 각종 환경개선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2014.04.01.

..... 경기도청 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팀

## 서울연구원, 베트남 핵심도시 싱크탱크와 연구협력 강화

서울연구원은 3월 28일(금)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하여 호치민 개발연구원<sup>4</sup>과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 연구원은 상호 역량 강화 및 지속성 있는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연구 수행, 인적 교류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이어 '서울-호치민 간 도시계획 및 개발 경험 공유' 워크숍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싱크탱크의 역할과 도시 및 교통계획 관련 이슈를 논의하였다.

아시아 지역 내 도시 관련 연구원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메가시티가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연구원 주도로 금년 7월초에는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 (Megacity Think-Tank Alliance, MeTTA)'가 출범될 예정이다.

<sup>4</sup> 호치민개발연구원은 호치민시 당위원회 및 인민위원회에 경제사회, 도시 환경 및 계획 등 호치민시 시정 전반을 자문하고 주요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창현 원장은 “아시아 지역 내 메가시티의 도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시연구원들이 그 동안 축적해 놓은 ‘솔루션(solution)’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베트남 싱크탱크와의 교류협정을 통해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도시개발경험을 아시아 메가시티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TTA)는 공통의 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촉매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4.04.02.

.....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 올해 농어촌주택개량 설계비 대폭 할인

충남건축사회와 30% 할인 협의...농어민 부담 8억 원 줄어

충남도 내 농어촌지역 노후·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한 도민의 건축설계비 부담이 줄어든다.

충남도는 충남건축사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주택 1359동에 대한 건축 설계비를 30% 할인한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저리(연 2.7%, 65세 이상 2%) 융자·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주택 건축 시 소요되는 건축설계비가 동당 200만 원 정도에 달해 농어민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달 17일 충남건축사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주택에 대해 4월부터 건축설계비 할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건축설계비 할인과 함께 농어촌 지역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소규모 건축물 무료 기술지원 서비스도 실시 중”이라며 “충남건축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낙후된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건축설계비 경감 : 1,359동 약 8억 원  
\* (동당 200만원) × 30% = 60만원 / 60만원 × 1,359동 = 815백만 원
- '14년 추진계획 : 1,359동 815억 원  
\*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주택에 대해 동당 6천만 원 융자지원  
\* 융자조건 - 연리 2.7%(65세 이상 2%)  
-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2014.04.02

.....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 “리조트 참사 재발 막자”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기준’, ‘유지관리’ 개선대책 마련

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Pre-Engineered Building)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 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준공 전까지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은 ‘건축물 안전강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개선한다.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여,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기둥간격	12m	20m	40m	60m	80m	100m
경사도	21°	33°	53°	63°	69°	73°

## ②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14.10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하였다.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 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하되, 내설 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였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 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신청일부터 15일 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 ③ 건축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 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된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

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 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자연재해대책법)이 추진 중이고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 중이며, 일선 지자체는 건설업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PEB 전수조사 완료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4.03.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20호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4월 7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며,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4월 7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현행)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나<sup>5</sup> 활용사례 미미

(개선)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 20호

<sup>5</sup> (현행 제13조제7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 허용 가능(단지·동·호 단위)

이상 임대사업자 추가<sup>6</sup>(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기대효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공급절차	비고
① 우선공급 협의(사업주체 : 임대사업자)	
② 우선공급 협의(입주자모집 승인권자 : 사업주체)	
③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입주자모집 승인권자) - 입주자모집 공고 안에 우선공급 주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함	주택공급규칙 제8조제1항
④ 입주자모집승인(입주자모집 승인권자)	주택공급규칙 제8조제2항~제4항
⑤ 입주자모집 공고(사업주체) - 입주자모집 공고 안에 우선공급 주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함	주택공급규칙 제8조제5항, 제6항 제2의3호
⑥ 우선공급 물량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사업자)	
⑦ 매입임대주택 등록증 사본 제출 (임대사업자→입주자모집 승인권자, 사업주체)	
⑧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우선공급 계약 취소 및 결과 제출 (사업주체→입주자모집 승인권자)	

#### ○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현행)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이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 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

<sup>6</sup> •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례 위임을 삭제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 가능  
•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 제한 가능  
•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공공성 확보

요해 사업지연 우려

(개선)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기대효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14.2.26)된 공공임대리츠 사업<sup>7</sup>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충

#### ○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 신설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3.6.23)으로 귀환 국군포로 주거지원의 일반적 근거 마련

(개선) 귀환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등(분양·임대 포함)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sup>8</sup>

(기대효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귀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에 보답하고 주거안정에 기여

#### ○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현행)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독립세대임을 요하지 않으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어 한부모가족도 독립세대임을 전제로 세대주임을 요함. 그러나 한부모가족으로서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② 노부모(65세 이상) 부양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

(개선) 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 제외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sup>7</sup> 국가·지자체·LH 등이 출자한 리츠가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사업('17년까지 최대 5만호 착공 목표)

<sup>8</sup> 이 경우에도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하여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기대효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노부모 봉양 장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현행) 청약자격을 위반하여 당첨된 자가 소명기간에 부적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자의 부주의한 청약으로 인해 다른 적격자의 당첨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첨취소이외에 소명여부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

(개선)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 부터 3개월 청약제한<sup>9</sup> 만으로 한정

(기대효과)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보호 및 청약활성화 기대

개정내용은 '14.4.7.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7.~5.19.) 중 주택기금과 (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2014.04.07.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금과

## 공동주택관리, 이제 정부가 직접 도와 드립니다

### 공동주택 관리 전담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문 열어

국토교통부는 4월 8일,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sup>9</sup> 청약제한 기간 대폭 단축(1~2년→3개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게 되어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되어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 유지 가능

우리나라 국민 다수(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동대표 선출·해임 등), 관리비·사용료(전기 등)등과 관련된 민원·분쟁과 갈등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관리비 집행을 위한 공사·용역 등이 적정하지 여부와 회계·입찰·시설관리 등은 전문가가 아닌 입주민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 현재 임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키로 한 것이다.<sup>10</sup>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민원, 관리비 등이나 층간소음 분쟁 상담·지원과 공사나 용역이 시기적 또는 내용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회계·입찰과 계약·시설관리 등)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 ①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 우리 아파트에서 뽑은 동대표, 자격요건은 제대로 갖추었는지?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려는데, 해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00비용을 관리비 또는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절차는?
- 아파트 외벽 도색공사 업체를 선정하려는데, 업체 선정 방법은?

#### ② 진단서비스

- (관리일반) 동대표 회의운영 방법, 관리규약 개정 적정성, 계약사무 자문 등
- (회계업무) 회계장부, 자산, 관리비등, 예·결산, 세무 관리 등 자문
- (시설관리) 급수, 난방,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주요시설물 현장실사 후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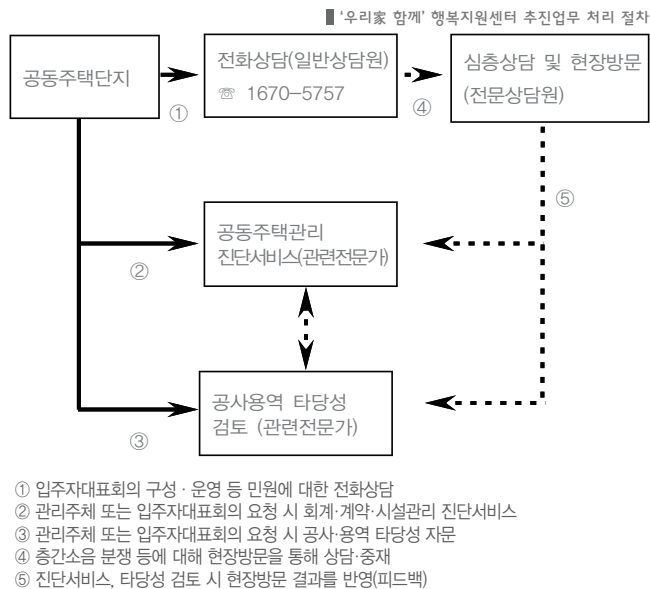
#### ③ 공사·용역 자문

- 주요 공사(도색·방수·배관·승강기 등)나 용역에 대해 시설노후화를 감안, 시기적 또는 비용적으로 타당한지 등에 대해 물량산출과 단가 적용을 통해 자문

이로써, 주택법령을 운용하는 국토교통부와 2천여 명의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공동주택 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공적 관리와 현장밀착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져, 아파트 관련 분쟁 및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입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의 삶이 행

<sup>10</sup> • 관리비등 규모: 11조(관리비 4조 2천억, 사용료 6조 7천억, 장기수선충당금 7천 억)  
• 공동주택 관리민원(건): (‘11) 8,214 → (‘12) 8,755 → (‘13) 11,323  
• 공동주택 관리소송(건): (‘10) 2,524 → (‘11) 2,844 → (‘12) 3,085  
• 2014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목적의 신규 예산 5억 원 배정

복한 공동주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04.0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서울시, 공공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가이드라인 시행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시공사는 시민들이 오갈 수 있는 진출입 및 통행로는 확보가 됐는지, 주변 상가 간판을 가리지는 않는지, 진동·소음·분진은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 등을 착공 전에 의무적으로 마련, 시행한다.

예컨대 주변 상가 현황 조사 결과 영업지장이 클 경우 야간 공사로 전환하고, 가림막은 상가가 잘 보이도록 크기를 최소화해 투명으로 설치한다. 임시계단은 설치를 최소화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한다.

또,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엔 '소음 전광판'을 설치해 소음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장 내에 합바식당을 별도로 설치하는 대신 주변 식당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마련, 시가 발주하는 모든 신규 공공 공사에 적용한다.

첫째, 공사장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가림막, 임시계단 등 인근 영업장의 간판을 가리고,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둘째, 주변 상가 이용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 공사를 금지하고, 구간이 긴 굴착공사의 경우 전체를 파헤치지 않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 내 운영하는 합바식당 설치를 지양하고 주변 식당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소모되는 물품도 주변 상가에서 구매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넷째, 공사장별 '현장 1도로 클린관리제' 실시로 공사장 먼지를 최소화해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 피해는 물론 상가가 입는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사장 내부만 청소하던 것을 공사장 주변도로까지 1일 2회 이상 살수차로 물청소하도록 하고, 주변도로 청소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해 쾌적함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섯째, 상가, 주거 밀집지역의 대형 공사장에 '소음 전광판'을 설치, 소음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대책에는 공사장 주변 상인들의 영업피해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가 고민한 결과가 담겼다"며 "이를 통해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투명 가림막 및 디자인 팬스 설치



주차장 진입로 표시

2014.04.09.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에 발 벗고 나선다

경기도, 4월부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사업' 추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복지회관 주변 환경개선

경기도가 연령, 성별, 장애여부 등의 차이로 공공시설과 공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광역최초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제정이 대표적 사례로, 이번에 시행되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은 그 연장선상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확산·보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성남시 등 5개 시·군이 응모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1,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선정됐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성남시 산성동 복지회관은 어린이, 영유아동반여성,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열악한 보행환경과 차량 안전사고 대책이 미흡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에 추진되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은 4월 전문가 자문 및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쳐 접근성 향상,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7월 착공, 연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도비 2억 원, 시비 3억 원이 투자되는 시범사업은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는 구조의 계단과 경사로의 병설, 보행보조기, 유모차,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하기 쉽도록 사용자 중심의 공간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2014.04.08.

..... 경기도청 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팀

## 건축물도 건강검진이 필요해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 7월 19일까지 정기점검 받아야

경남도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2.7.19.)에 따라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해 2년마다 건축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1994. 7. 18.(포함) 이전 건축물로서 점검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점검기간은 4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며 소유주(관리자)가 건축사무소,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점검업체 목록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세움터 홈페이지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 점검업체 목록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점검자에 대한 비용 또한 세움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비용은 연면적, 건축물의 건령,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점검내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등을 점검하며 점검 후 점검결과는 점검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거나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시·군·구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며 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 등)에 제한이 있으며, 과태료 또한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관리가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 1회 정기점검이 면제되는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경남도내 20년 이상 점검대상 건축물은 1,623동(조례대상 건축물 제외)으로 4월 19일까지 점검대상 건축물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점검대상임을 통보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건축물의 기능, 성능, 안전성 회복·향상을 위해 반드시 건축물 정기점검을 받도록 당부했으며, 이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04.08.

..... 경남도청 도시교통국 건축과

## 근대역사 보물창고 좌천동, 산복도로 휴먼 빌리지로 재생 추억의 동굴 복원과 함께 역사마을 조성

부산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4차년도 좌천·수정·주례구역의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좌천동 역사마을 조성사업’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좌천동은 △임진왜란 때 정발장군을 기리는 정공단 △3.11만세운동을 주도한 일신여학교 △1891년 설립돼 오랜 역사를 가진 부산진교회 △6.25전쟁 때 부상자를 치료한 일신기독병원 △김말봉 문학가 집필지 등 역사자원과 지역연계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현재는 도심 속에서 공·폐가가 발생하고 주변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해 슬럼화 된 지역이지만, 무엇보다 주민협약회가 활발히 운영되는 등 주민들이 솔선수범해 이들 기존자원을 활용,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곳이다.

시는 근대역사 보물창고인 이 지역을 ‘산복도로 휴먼 빌리지’로 재생할 계획이다. 휴먼 빌리지는 기존 문화예술의 마을 재생 방식에서 태양열과 같은 친환경에너지와 폐가 또는 공지 등에 소공원 등의 녹색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시가 이번에 추진할 시범사업은 일본의 강점기 무기로 사용하던 동굴 2곳을 복원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근현대 한국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여성작가이자 대표적인 신여성으로 활발하게 여성운동을 펼치기도 했던 김말봉 문학가가 작품 찔레꽃을 집필하던 곳의 주변 공가를 리모델링해 집필책 전시와 함께 게스트 하우스로 조성하게 된다.

또한 주변의 계단 길을 찔레꽃길로 조성하는 등 문학마을 풍경으

로 만들 계획으로, 조명은 태양광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좌천동 도시철도역에서 일신여학교에 이르는 골목길도 정비하고, 수정터널 밑의 웅벽도 자개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조성하며, 조명을 설치해 야간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근의 유명한 좌천동가구거리 자개골목과 연계해 그곳의 인재를 활용 나전칠기(자개) 체험공방을 운영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며, 자개공예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고지대 에너지 공급의 어려움이 완화될 전망이다”라면서, “마을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돼 관광객이 유입되고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돼 마을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4.04.09.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 10년 이상 된 건축물 건강검진 의무화

9일,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관계공무원 영상회의

충남도는 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30여 명을 화상으로 연결한 가운데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의 시행에 따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새롭게 확대·개편된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는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시·군 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소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적절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제도다.

특히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한 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 실시하는 수시 점검으로 구분된다.

점검은 건축물 소유자 등이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소속된 건축전문가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건축행정 전산 시스템인 '세움터'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해 실시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6개 분야로 ▲대지의 안전 ▲높이·형태의 적정유지 여부 ▲구조안전 ▲화재(피난 및 방화)안전 ▲건축설비 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이며, 점검 결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점검자의 의견이 제시된 경우 부적정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도는 점검기한 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점검대상 건축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기한 내 점검이 이행되도록 개별안내와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이홍규 도 건축도시과장은 “점검대상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고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해 건강한 건축물로 유지·관리되도록 안내와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조기정착을 통해 경주 마리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불의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14.04.09.

.....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 바다를 시민들의 품으로

부산시, 연안 유휴지를 힐링 공간으로 재창출

부산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연안에 대해 2000년부터 꾸준히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 결과, 시민들이 친수공간에서 자연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재창출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은 2008년부터 260억 원을 투입, 약 143천㎡에 방사림을 설치해 자연 재해를 예방하면서 바닷가 안에 정원을 꾸며놓은 듯 실개천이 흐르고, 자연생태가 그대로 담겨있는 늪지대와 바다를 향한 자연 공연무대, 시민들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잔디광장 조성 등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06년부터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인 자갈치 시장에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뱃고동 소리를 간직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101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해안 산책로 공사를 올해 12월 전 구간 650m를 완료 할 예정이다.

특히, 47년 만에 재개된 영도대교 도개 광경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어, 해안 산책로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 당시의 애환을 담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물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해안을 보존시키면서 연안해역 개선과 친수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안힐링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2014.04.11.

..... 부산광역시 항만물류과

## 광역도시계획 수립, 주민 참여 길 넓혔다

도 홈페이지 내 개설...주민 제안 코너서 의견 개진 '간편하게'

충남도가 내포신도시권과 공주역세권 등 2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들이 보다 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도는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내에 '주민참여형 광역도시계획' 홈페이지를 개설,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계획의 개념과 수립과정, 현황, 알림마당, 주민 제안 등으로 구성했다.

접속은 도 홈페이지 '행정'코너에서 주민참여형 광역도시계획 페이지로 들어가거나, 첫 화면 중앙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도는 그동안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과 이에 대한 반영 여부 검토 등을 위해 주민협의회나 광역도시계획추진단, 총괄계획가, 계획조정단을 구성·운영해왔으며, 이번 홈페이지 개설로 주민 의견 수렴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과 함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은 전국 최초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미래를 직접 계획한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진행상황과 관련 자료 등을 신속히 제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포신도시권과 공주역세권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추진 중으로, 시·군별 기초조사, 주민협의회 개최 등을 마치고, 앞으로 열린워크숍을 거쳐 오는 8월 광역계획권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10월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2014.04.15.

.....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 지적확정측량 업무 '기간 단축되고 절차도 통일된다'

국토교통부, 지적확정측량 규정 제정·공포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부터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세부적인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390여건에 약 4,500km<sup>2</sup>(여의도 면적의 약 1,500배)가 시행된다.

그러나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시·도별 자체 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측량 절차 및 검사 등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였고,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시·도지사만 할 수 있어 성과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적확정측량 검사기관의 분리, 지적확정측량 처리절차 및 방법, 성과 검사 시 제출서류, 성과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방법 등이다.

본 규정의 시행으로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민간지적측량업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측량 시행 및 검사 요청이 가능해진다.

특히, 성과검사 기관이 현재 시·도에서 시군구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측량성과 검사가 가능해져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처리 기간도 단축<sup>11</sup>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 각종 공부의 작성이 빨라져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4.17.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sup>11</sup> 지적확정측량기간이 1년일 경우 검사기간이 당초 90일에서 60일로 30일 단축

## 좁고 복잡한 골목에선 '걸음길 도우미' 이용하세요

국토부, 「보행자용 상세 도로망도」 서울지역 시범구축

국토교통부는 건강한 도시, 걷는 문화 정착을 위해 빠르고 다양한 이동경로를 지원하는 걷기 내비게이션 앱(걸음길도우미)을 개발하여 4월 23일(수) 시범지역인 서울시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상용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주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보행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보행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 좁은 골목길, 육교, 계단, 지하보도 등 상세한 도로망도의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GIS/LBS 연구그룹)과 공동으로 고정밀 지도를 구축하고, 보행자용 상세 도로망도<sup>12</sup>를 쉽게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시범적으로 서울시 「상세 도로망도」를 구축하고 보행자 전용 내비게이션 「걸음길 도우미 앱」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에 대한 현장테스트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서비스 초기로 이용자가 많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으로 우선 서비스되며, 앞으로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우선 서울지역 「보행자용 상세 도로망도」를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에 개방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보행자용 상세 도로망도」를 민간이 활용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안전한 경로 안내 등 다양한 목적의 콘텐츠 개발에

<sup>12</sup> 수치지형도, 도로명 주소 기본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보도, 자전거길,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단지 내 도로 등 상세한 보행자길 정보가 구축된 지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 이외의 지역은 예산 및 이용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행정기관과 민간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브이월드(www.vworld.kr)와 유통시스템(www.nsic.go.kr)을 통하여 공간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14.04.22.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행복주택 건설’ 위한 건축기준 특례 마련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복주택건설시 특례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100분의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다.

행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하거나 대부·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며, 녹지·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해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행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 ① 제명 및 용어의 변경 (보금자리주택 → 공공주택)
  -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법률 취지를 감안, 제명 및 용어를 변경
  - ※ 국민임대주택( '02~'08) → 보금자리주택( '09~'13) → 공공주택( '14~ )
- ② 행복주택 건설관련 (제9조, 제40조, 제40조의2~제40조의6)
  - (사전의견수렴 제도화)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주민 등에게 미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임대료·임대조건 별도기준 근거) 행복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복합주거단지) 행복주택지구내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함
  - (국·공유지 사용특례) 행복주택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고, 사용기간을 50년 이내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과 사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정함
  - (학교용지확보 완화) 행복주택지구의 입지특성 등을 감안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인근학교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기준 완화) 철도부지,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 도시공원·주차장 등의 완화근거 마련

2014.04.22.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주택법(13.12.24. 개정·공포)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4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2014.4.25. 시행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였다.

다만,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2차레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하며, 50세대 이상<sup>13</sup>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한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 단위)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도 규정하였다.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 바닥구조, 승강기 설치, 조정기준,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sup>14</sup> 하였다.

<sup>13</sup> 입법예고(13.12.24.~14.2.3.)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완화(20→50세대)

<sup>14</sup>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간 경계벽 구조,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

## ②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2014.6.25. 시행(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 등은 2015.1.1. 시행)

■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사항

주택법상 강화 또는 신설된 내용	상향(시행령→법)된 내용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의무화
△ 주택관리업자 등과의 계약서 공개 의무화	△ 관리비등의 장부·증빙서류 열람청구권
△ 장기수선계획 검토(3년) 의무화	△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업자 선정시 전자입찰제 시행(임의·의무)
△ 지자체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의무화	△ 관리비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의 근거 규정
△ 관리소장 교육 강화(평생 1회→3년마다 1회)	
△ 지자체 감사 근거 마련	
△ 공동주택관리 지원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 비리자 등에 대한 처벌강화 등	

## ③ 기타 개정사항

- △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공동 결정(관리방법, 장기수선계획, 주택관리업자 선정,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 ※ 협의 불가시,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선정은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그 밖의 사항은 2/3 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에 따름
- △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요건 규정
- △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 완화

2014.04.22.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주택정비과

## 울산시,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거쳐 내년 말 최종 확정

‘2030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된다.

울산시는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도시의 장기발전방향과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의 전반적 재검토와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반영

하는 '2030년 울산도시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기본 계획수립지침에 따라 20년 기준으로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국토의 개발정책, 도시 및 산업여건 변화 등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적 도시발전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하위계획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은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의 목표와 지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경제·산업개발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울산시는 4월 중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에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 정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도시 발전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22.

..... 울산시 도시계획과

##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첫 발 내딛어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선도지역<sup>15</sup>으로 1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상향식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여 총 86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문화·경제·복지·도시·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를 시행하고,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지정되었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되었고,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되었다.

###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계획

- △ 일정 : 5월(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확인·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9월경(계획수립 완료, 사업 착수), '17년까지 4년간 시행
- △ 재정지원 : 계획수립비(0.5~2억 원)와 사업비(60억 원~250억 원) 4년간 국비로 지원, 금년에는 계획수립비 전부(13.1억)와 사업비의 20% (280억 원)가 예산으로 책정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자원 요청 시,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
- △ 행정·기술지원 :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
- △ 근린재생형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토록 지원(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 경제기반형은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sup>16</sup>을 지자체·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sup>15</sup>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하는 지역

<sup>16</sup> 예) 역세권, 터미널 등 주변 개발,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공공+민간 복합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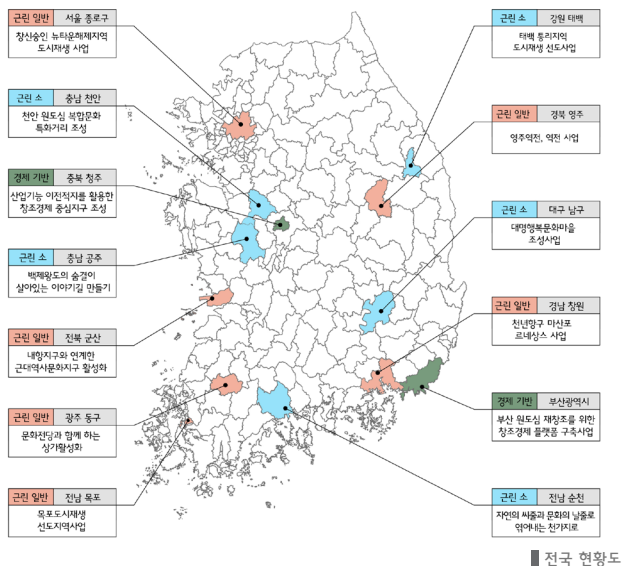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 선도지역 외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계획

- △ 금년에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
- △ 금년에는 선도지역 외 지역의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
- △ 이번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역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
- △ 그 외의 지역도 수요조사를 통해, 6~7월 중 주민·지자체 공무원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200여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
- △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시 상담 및 컨설팅을 시행
- △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번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추도시생활권 등의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04.2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일사편리’ 서비스 이용, 100일 만에 51만 건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 현황과 이용 활성화 계획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련 서류 18종을 하나로 통합한 일사편리<sup>17</sup> 서비스 100일을 맞아 그간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3.0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부동산종합증명서<sup>18</sup>를 '14.1.18.부터 전국의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 온라인(www.onnara.go.kr)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일사편리 서비스 시행 후 '14.4.25.까지 100일 만에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가 51만 건(1일 평균 7,500건)을 넘어섰다.

또한, 온라인 열람·발급도 서비스 시행 초기인 1월에 1일 평균 455건에서 4월에는 1일 평균 97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토지보상, 농어업인 지원, 보금자리 주택, 국제징수, 신탁재산 관리 업무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일사편리 서비스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간 협조를 통하여 부동산 등기, 국세, 국유재산, 농지, 도로 업무 등으로 서비스 이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전 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sup>19</sup>를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sup>17</sup> ‘일사편리(一事便利)’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정책브랜드로, 친숙한 한자성어 ‘일사천리(一瀉千里)’를 본따 ‘한 장으로 편한 부동산 서비스’의미

<sup>18</sup>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연계한 것

<sup>19</sup>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구비서류(행정기관 발급물 등)를 제출 생략토록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정부3.0 서비스 실현을 위해 부동산종합 정보에 대한 민간개방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28.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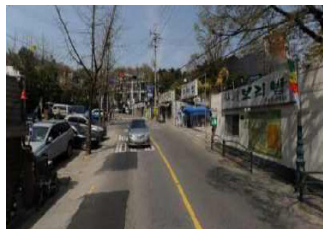
## 성북 역사문화지구, 걷기 좋은 길로 변신한다

### '역사문화지구(성북구)' 보행환경 · 안내체계 개선에 편리한 문화탐방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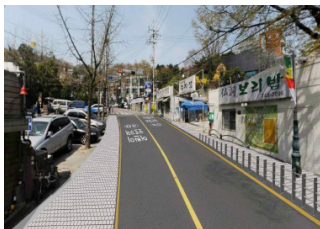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성북 역사 문화지구는 간송 미술관, 성북구립 미술관, 심우장 등이 있는 곳으로 평일 1천 6백 명, 주말에는 2천여 명이 찾는 곳이다.

서울시는 성북 역사 문화지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행공간 확보 △쉼터 조성 △유적지, 미술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역사문화 탐방로에 걸맞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요 사업 구간인 성북동길(640m)은 기존에 보도가 단절되어 사고 위험이 있었던 곳에 보도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 지역에 위치한 성북초교, 명수학교 등 학교 주변 도로도 대폭 개선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성북동길 개선 전



■ 성북동길 개선 후

성북동에는 만해 한용운의 유택인 심우장, 삼청각 등 역사적 장

소와 문화공간 등이 한데 모인만큼 1.6km에 달하는 보도를 정비해 보행자 중심의 탐방로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로써 성북동의 역사문화 명소와 북촌, 삼청동, 인사동까지 이어지는 전통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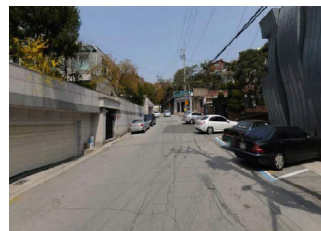


■ 성북로 31길 개선 전



■ 성북로 31길 개선 후

아울러 2015년까지 삼청각과 길상사까지 이어지는 보행로 개선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지역을 걸으며 역사문화적 요소들을 느낄 수 있도록 보행에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해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 성락원 진입로 개선 전



■ 성락원 진입로 개선 후

한편, 서울시는 작년 10월부터 광진구 구의강변로, 용산구 이태원세계음식문화거리, 중구 명동관광특구,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성북구 역사문화지구 5개소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보행환경을 개선해오고 있다.

시는 성북 역사 문화지구가 향후 새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는 곳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앞으로 도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보행환경개선지구를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설계단계부터 교통·안전시설 조성 등 기술 및 행정적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성북동 지역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최우선 과제이다.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4.28.

.....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 부산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부산시는 4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사업(이하 창조경제 플랫폼 사업)’을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도시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지정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창조경제 플랫폼 사업’이 선도지역 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비로 4년간 국비 250억 원을 지원 받게 되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의 행정·기술적인 사향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 사업의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부산시가 도시재생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도 계획에 포함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창조경제 플랫폼’의 주요내용은 부산 원도심의 산업구조 개편과 도심 공동화에 대응해 원도심 활력 및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북향재개발과 연계한다. 부산역을 중심으로 △원도심

관문지역 △원도심 상업지역 △원도심 주거지역으로 구분해 도시재생의 거점역할을 하도록 사업을 추진,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롤 모델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부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현재 부산항만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는 ‘원도심 연계방안 및 보행데크 기본구상 용역’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에서 진행 중인 ‘부산지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이외에,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신청했던 10개 구·군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체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게 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입법 예고돼 있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조례’를 6월에 제정하고,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칭 ‘(재)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다.

또한, 부산역 광장일원을 세계적인 도시재생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부산역과 초량동 산복도로를 잇는 ‘광장형 연결데크사업’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국제현상 공모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월 중 도시재생 전문가 참여를 위해 (사)한국도시설계학회와도 ‘부산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에 있다.



창조지식플랫폼 조성예시

2014.04.28.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과

## 광주시,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 사업비 200억 투입... 원도심 활성화 발판 마련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사업에 원도심인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동, 지산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근린재생형 '새롭게, 낮익게, 깨비동 문화동구'사업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원도심 동구지역에서 푸른길로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문화전당과 함께하는 상가 활성화를 주제로 4년간에 걸쳐 200억 원(국비 1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갈마촌 예술마을, 나무전거리 아트스트리트, 푸른길 문화광장, 남도음식거리 등 마을 만들기 사업 △깨비동하우스, 푸른길아트공방, 충오창의단지 등의 일자리만들기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동명 근대양옥마을 답사길, 문화전당 카페공방

거리, 충장로 청춘극장 등 지역문화 만들기 사업이다.

오는 5월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 2017년까지 시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돼 도시재생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성공적인 재생사업 추진으로 주변까지 사업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014.04.28.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 천안·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국토교통부 공모 결과 발표...향후 4년간 60억 원씩 지원

천안시의 '복합문화특화거리 조성 사업'과 공주시 '백제왕도의 숨결이 살아 있는 이야기길 만들기' 사업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60억 원씩을 지원받게 됐다.

충남도는 28일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공모 사업에서 천안시와 공주시가 근린재생형 선도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으로 천안시와 공주시는 앞으로 4년간 국비 120억 원의 사업비와 행정·기술적 지원을 받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평가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이날 전국 13곳의 선도 지역(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을 선정했다.

경제기반형은 국비 250억 원을 지원받고, 근린재생형은 60~100



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쇠퇴한 구도심을 재생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전국 13개 선도지역중 2개 선도지역이 우리 도내에서 선정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가 확보됐다”면서 “앞으로 도시재생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돼 침체된 원도심에 온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4.28.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앞으로도 전북도에서는 전주, 완주를 비롯하여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는 정읍, 김제 등 주요 시 대부분이 2~3년 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쇠퇴한 원도심 개발은 물론 지역공동체 회복,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04.28.

..... 전라북도 지역개발과

## 군산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쾌거

전국 13개소 중 근린재생형 일반규모 공모에 최종 선정  
금년부터 4년간 국비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 투입 계획

군산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선정되어 4년간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원도심 재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28일 군산시가 최종 선정되어 2017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원도심 종합재생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근대역사문화, 내항지구와 연계하여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계획수립비 9천만 원을 시작으로 금년도에 20억 원, 4년간 총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9월까지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최종 선정된 군산시를 비롯해 한옥마을을 연계한 전주시, 농촌교육등을 특화한 완주군(삼례읍)이 도전하였으나 전주시와 완주군은 1차 평가에서 아쉽게 제외되었다.

## 경남도, 마산합포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돼 활력 기대

국토부 28일 발표 ... 전국 86개소 중 마산합포구 포함 13곳 지정  
(구)마산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 ... “경남미래 50년”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창원 마산합포구를 포함하여 13곳을 지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전국에서 86개소가 참여했으며 최종 13개소가 지정되는 등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경남도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선도사업으로 (구)마산 원도심 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부림시장, 창동예술촌 중심의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새롭게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이 사업으로 쇠퇴한 지역 도심을 살리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주거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 중 50%에 해당하는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세부사업을 보면 부림도시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임항선 추억을 예술로(路) 프로젝트, 불종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천년항구



마산포 종합안내정보시스템 구축 등 10개 사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이번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홍준표 도지사가 마산합포구 창동·오동동 일대를 찾아 도시재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며, 또 '마산 재생프로젝트'를 '경남미래 50년' 전략계획으로 선정하는 등 (구)마산 원도심 개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한편, 경남도 허동식 도시계획과장은 "마산재생 프로젝트의 선도 사업을 통해 인근 어시장 등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산 원도심 부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4.28.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14.2.26.) 후속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 추진을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근거 마련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 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며,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할 후,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14~'17년간 LH 10년 공공임대의 착공물량이 당초 2.6만호에서 2배 수준(5만 호)까지 확대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민간 제산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되며, 나아가, 리츠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로 시세 이하, 임대료 증액률 연 5% 이하 등을 적용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현행 임대주택법상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등록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된다.

임대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하되,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 임대조건(연 5% 이하 증액), 임대조건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신고(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 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위반 정도에 비하여 형사처벌이 너무 과도하여 소규모 민간 임대사업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과태료로 전환한 것이다.

한편,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과는 별도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으로,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또한 이날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150만 호에 달하는 전국의 공공·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보등록 절차 및 업무위탁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에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등록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임차인 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내년 이후에는 해당 시스템을 수요자가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맞춤형·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거복지포털시스템<sup>20</sup>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4.29.

..... 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

## 조합 동의율 낮춰 소규모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속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
- △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 의무
  -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도의 비용 지원
  -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sup>21</sup>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받을 수 있도록 함
-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자 면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자 면제 대상 등은 시·도 조례로 규정

##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완화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
- △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정기준 완화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sup>20</sup>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주택기금포털을 통합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sup>21</sup>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 ○ 기타 제도개선 내용

- △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
  - 현재 재건축사업에서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 발생 우려
  -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그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규정
  -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 △ 조합 총회 소집 시 안전 통지의무 신설
  - 현재 표준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전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 : 표준정관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로 안전 통지의무 미준수 상존
  -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전·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 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자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전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14.04.29.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본격화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가 인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 등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약 70%(총 115개 기관 중 81개)가 올해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혁신도시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혁신도시의 전체용지 분양률이 79.2%(14.3월말 기준)인 점

을 고려할 때 산·학·연 클러스터의 경우 낮은 수준의 분양률(15%, '14.3월말 기준)을 기록해왔다.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LH 등)는 지난 제5차 무역투자회의('14.3.12.)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내용<sup>22</sup>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①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근지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4개 혁신도시의(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분양가격을 인하하여 공급(4,30.~)한다.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 자금지원,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지원 및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마련된다.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sup>23</sup>하여 입주기업이 지방세감면 혜택(재산세 및 취득세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예: 교육부의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의 유치도 용이하도록 한다.

②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sup>24</sup>의 입주만 허용했던 것을, 지역산업간 집적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sup>22</sup> 분양가 인하, 입주허용기관 확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등

<sup>23</sup> 대구·충북·경북 3개 혁신도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을 신청하였고, 향후 최종 지정여부는 '14년 말 결정 될 예정

<sup>24</sup> 지역산업관련 각종 연구원·관리사무소·비영리재단 등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필지를 분할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시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을 통한 용지공급이 원칙이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sup>25</sup>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 내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 이를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혁신도시 내 다양한 기관이 입주하여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4.29.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혁신도시개발과

## 영주시, 전국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영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지정됐다. 이로써 영주시는 4년간 200억 원(국비50%, 지방비50%)의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영주시는 2009년 도시재생통합마스터플랜에 의한 관사골, 신사골, 향교골의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삼각지 마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연계돼, 사업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도시재

생의 롤 모델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주민 스스로 변화의 노력과 의욕, 시 전담부서인 도시디자인과와 도시디자인 관리단, 지역 국회의원, 지역전문가들의 자원봉사 등 민·정·관·전문가들의 일치된 협력이 심사위원들에게 어필된 점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정된 도시재생사업은 영주1,2동지역인 후생시장과 중앙시장 그리고 구성공원 주변을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후생시장의 △근대한옥 상가 복원을 통한 역사경관 형성 △옛 점포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문화공간 지원을 통한 문화컨텐츠 확보를 비롯해 중앙시장의 △청년시대를 위한 창작활동 및 창업지원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상권 활성화 △재생권역들의 핵심거점 역할, 구성마을의 △마을작업 공간을 통한 마을기업 지원 △U-프로그램을 통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공동공간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등 3개 권역으로 구성돼 있다.

영주시는 도시재생사업 원년인 2014년에 지구별 계획수립비 9천만 원과 사업비 40억 원을 긴급 투자해 도시 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04.29.

..... 경상북도

## 국토부, 숨은 지역 건축규제 발굴하여... 상시 정비·관리하기로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운영, 규제 발굴 건축사 간담회 개최 등

앞으로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국토교통부가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를 조사하여 지

<sup>25</sup> 이전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업·대학·연구소



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폐지한 것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 방위적으로 정비·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 및 집행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임의지침이 잔존하고 지속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숨은 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선 신고(신고센터 전화, 02-3415-6835)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한 신고 외에도 별도의 인터넷 카페도 운영할 계획이며, 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될 것이므로 많은 규제개선 건의나 임의규제 신고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에서는 건축현장의 일선에 있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기존의 건축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 건축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많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숨은 건축 임의규제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건축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숨은 규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고센터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04.30.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노후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 (2009~2013)

이유리\_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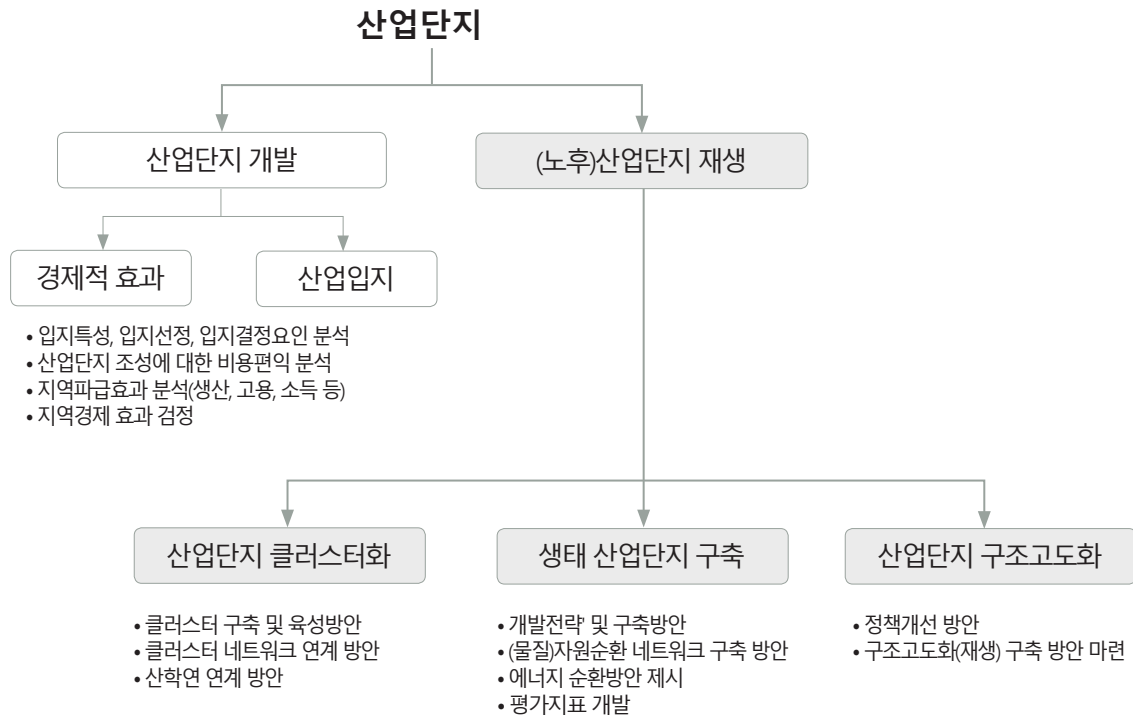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시행과 더불어 국가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뒷받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초로 1964년에는 첫 국가산업단지인 구로공단(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 조성되었다. 산업단지는 이후 일반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산업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산업환경의 틀을 형성하였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50년 가까이 경과하였다. 30년 이상 지난 1세대 산업단지(울산, 구로, 부평·주안)를 포함하여 여러 노후단지들에서 도심지역과의 부조화, 생산설비 및 지원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도로 및 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교통·물류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노후 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하고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산업단지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발표된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제고’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세부 주제별 주요 연구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연구동향 흐름

산업단지 관련 연구는 주제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과 ‘(노후)산업단지 재생’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연구는 90년대까지 주로 산업단지의 개발실태, 개발방향, 정비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산업입지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지자체 수입, 고용 창출, 주변지역 주택가격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후)산업단지 재생’과 관련해서는 크게 산업단지 클러스터화, 생태 산업단지 구축, 노후단지 구조고도화 등 세 가지 측면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능의 쇠퇴로 나타난 노후 산업단지의 재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세 연구 주제는 서로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



■ 산업단지 연구동향 흐름도

###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연구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제조업 중심지들은 더 이상 노동·자본집약적인 방식이 아닌 지식창출 및 혁신, 연구개발 활동 등이 생산과 상호 긴밀하게 결합하는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클러스터 육성, 산학연 연계, 더 나아가 광역권 단위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입지요인을 분석하거나(김종중 외, 2009; 권재중 외, 2009; 전동호 외, 2012), 클러스터 형성과정 및 형성요인을 분석하거나 정책방향성을 제시한 연구(권오혁, 2010; 문진주, 2011; 주성재, 2013), 산학연 기능 간 지식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문문철, 2011; 조성의, 2010; 2011; 2013a; 2013b) 등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 구로공단의 산업구조 재편을 시작으로 노후 산업단지들의 클러스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다룬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서울산업 클러스터의 형성 및 성장요인과 공간적 특성, 직접효과를 분석한 연구(정순구 외, 2013;

장석명의, 2009a; 2009b; 2010),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입지요인을 분석하거나(김종중 외, 2009), 생애주기를 분석한 연구(구양미, 2012)등이 그러하다.

한편, 제조업 이외에 문화산업단지 조성(김삼철 외, 2013; 서정수, 2011; 2012; 신동호, 2011; 심상민, 2010)과 식품클러스터 건설(김정옥 외, 2012; 이철우 외, 2009)과 관련된 연구도 다수 나타났다.

####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 네트워크 활성화 방법론 문문철 (2011)

- 광역권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간 또는 초광역간 전략·선도업종의 산학연 협력네트워크의 지속적 확충,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컨설팅 강화와 기업연계 개발 사업(C&D)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p1680)
- 미니클러스터 네트워크 활성화 과제를 지원하고 이니셔티브를 조직화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기관의 전문성 확대, 콘텐츠 강화와 지원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함. 대학, 연구기관, 기업, 정부를 포함한 각 주체들은 고유한 목적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상호 협력하기가 곤란하므로 상호 목적이 상이한 주체들을 잘 연계하여 기업이 혁신하기 좋은 환경을 이끌어 내는 중개기관의 역할을 사업 추진기관이 수행하여야 함.(p1682)

####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신동호 (2011)

- 우리나라 광역지자체들도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이 많은 사업의 경우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발전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 등에 기획과 집행기능을 위임하여 사업을 기획하는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기획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효과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p82)

#### 산업클러스터,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의 가능성 주성재 (2013)

- 각 클러스터가 갖는 기업구조, 생애주기, 입지특성과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은 오히려 개방적이고 유연한 클러스터의 발전을 막음. 각 산업 부문과 연계된 소재, 부품, 지식서비스산업들이 동반 발전하는 체계도 형성되지 못함.(p563)
- 지리적 집중과 상호 연계라는 클러스터 본질에 충실해야 함. 창조성, 창조적 기업, 창조적 인력이 자생하여 공존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함. 국지적, 지역적, 세계

적의 각 차원에서 다중 스케일의 산업클러스터를 지향해야 함. 지역정책과 산업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클러스터의 요소를 입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책에서 제시한 수단들이 상호 연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p564)

**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입지요인 분석**  
- 서울디지털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김종중·김갑성 (2009)

- 임대료 등 관리비용의 적절성, 통신·교통 등 기반시설의 양호함, 접근성, 공급 및 고객업체, 동종업체의 집중 등이 입지적 이점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및 향후 필요한 시설에 대한 설문에서는 금융 및 고급인력 확보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p95)
- 현재 위치에 계속 입지할 이유로 주요 고객업체 및 판매시장에의 접근성, 기술협력 및 제휴를 위한 동종 관련업체의 집중 등으로 나타남. 한편 시지원자재 및 부품공급업체의 공급성, 전문인력확보의 용이성, 기업지원서비스(경영, 금융, 마케팅 등)의 집중성 등은 부정적인 입지 요인으로 분석됨.(p95)
- 입주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단지 내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기관의 활용가능성, 교통편리성, 장소의 지명도, 연구개발-생산 체계 등의 요인에 대해 더 많은 지원과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p96)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요인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정순구·최근희 (2013)

- 지속적인 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나 클러스터의 육성에 관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원과 조정기능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입주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역의 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이루어내야 함.(p191)
- 클러스터는 지역적 여건, 산업의 유형과 전문화 정도,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태를 보임.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지역의 역량, 제약요인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p191)

## 생태(친환경) 산업단지 구축에 관한 연구

생태산업단지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개발전략 및 구축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관련 연구로는 해외 생태산업단지 사례를 소개하거나(반영운, 2009), 구축방안 및 계획요소를 마련한 연구(이재용 외, 2011; 이은엽, 2012),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조경두, 2009; 공형욱 외, 2011)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산업단지의 폐·부산물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및 에너지 순환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관련 연구로는 폐기물시설을 중심으로 환경관리시설의 문제와 개선방안(최정석, 2009)을 제시하거나, 생태산업단지에서의 물질 재활용에 대한 연구(이강우 외, 2007; 김현주 외, 2008), 폐기물 교환 또는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방안을 마련한 연구(강경호 외, 2011; 김순아 외, 2006)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2005년 시범단지(포항, 울산, 여수, 반월·시화, 청주 등 5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6월부터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단계에서는 3개의 산업단지(대구, 부산, 군산)가 추가되어 총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네트워크의 확산을 목표로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반영운 외, 2010)가 발표 되었다.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 성과평가지표 개발 반영운·주경선·정현근· 황규환 (2010)

-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총 23개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각 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한 결과, 사업화 과제 수(0.155), 사업화 과제의 경제적 효과(0.121), 과제 수행에 따른 오염물 배출저감 실적(0.109), 발굴 과제 수(0.090), 과제 수행 계약 건수(0.058) 등의 순으로 나타남.(p142)
- 생태산업단지의 전국적 확산에 앞서 향후 생태산업 단지의 추가 선정에 있어서 생태산업단지의 확대된 개념에 보다 적합하도록 자원 순환적 측면과 더불어 기업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업 간 협력관계, 녹지네트워크 연계 및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등의 생태적 공간조성, 지역 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기구 구성 등의 지역 사회와의 협력 등이 반영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선정지표 개발이 필요함.(p144)



### 한국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개선방향 공형욱·고재철 (2011)

-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폐기물이나 부산물 교환을 위한 DB기반 구축과 관리체계 구축임. 폐기물, 부산물교환을 위한 DB인 '올바로스시스템'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보통이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83.3%를 차지함. 개선을 위해서는 성분자료, 위치(GIS), 생산원료를 기반으로 DB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조사됨.(p9)
-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한 사업단 인력배분과 함께 기업체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내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 지원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기업에서는 정부제도에 대응하여 인력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야 함.(p12)
- 중소기업 중심의 국내 산업단지 여건상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이 미흡함. 중소기업의 정부자금지원 프로그램 활용도 증진을 위해 기관차원에서 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료 수입이나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함.(p12)

### 산업단지 환경시설관리의 문제와 개선방안 최정석 (2009)

- 정책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공영화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용 종료된 폐기물매립장의 환경관리를 제도화하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폐기물매립장을 공공용지로 조성하여 관리하며, 산업단지 환경시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업종계획을 유연하게 하여 산업단지개발의 환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p143)
- 관리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단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폐·부산물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통계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며, 산업단지의 통합환경관리제도와 산업단지별 총량주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임대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산업단지의 환경관리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주민참여시스템을 제안함.(p143)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관한 연구

산업여건의 변화와 주변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환경재정비가 요구되면서 산업단지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구조고도화는 재생, 재정비, 리모델링 등의 다양한 용어와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의 쇠퇴현황을 파악하고 구조고도화 사업 실행의 문제점을 살펴보거나, 구조고도화(재생) 사업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관련 연구로는 산업단지 재생과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및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거나 계획요소를 도출한 연구(홍진기, 2009; 박은병 외, 2011; 최정석, 2011; 이성희 외, 2011), 재생과정에서 이전업체의 선정기준을 제시한 연구(김준형 외, 2010), 사업의 민간참여방안을 제시한 연구(하권찬, 2012)등이 있다.

## 산업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김대근·강명구 (2011)

- 산업지역 재생을 위한 방법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데 반해 구조고도화사업은 업종고도화와 기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특성이 있음.(p112)
- 산업지역 재생은 클러스터와 복합화를 염두에 두고 집적을 통한 시너지를 이루게 해야 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 회계, 금융 등 지원, 편익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내용은 여전히 기반시설 확충 등 물리적 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질적인 변화를 동반한 산업단지의 재구조화와 혁신클러스터를 염두에 두고 그에 맞게 기술 및 기업지원, 집적화, 업종고도화 유도도 병행되어야 함.(p112)
-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담당조직을 구성하고 그 규모를 확충해야함. 단기적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방식은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비가 막대하여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p112)

##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연구 최정석 (2011)

- 산단재생이 오랫동안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산단재생사업이 사업시행자에게 엄청난 재원투자를 요구하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우며, 재생사업의 시행경험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임.(p262)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하권찬 (2012)

- 산단 재생사업이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생사업지구의 용지매입비, 부지조성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함. 개발단계에서 대상기업에 대해 환지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시계획을 반영하고 최종적인 사업방식을 결정하도록 재생사업 방식에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음.(p259~260)
- 산단 재생사업을 사업자부담 방식의 대체 산단방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의무화시키지 않고 국비 또는 지방비의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시행하거나, 인근에 조성중인 산업단지를 대체 산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임.(p260)
- 구조고도화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국내사례가 없어 시장성에 대한 확신과 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 현재 산업단지의 토지소유권이 민간업체에 있어 공공입장에서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용도변경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임.(p196)
- 갭파이낸싱과 수익보장 등 재원조달방안을 통해서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강화방안이 필요함. 세제감면 혜택을 통해서 수익성을 향상시킴으로서 민간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p196)
- 법 개정 등을 통한 단독사업자로서, 지원·제공 등을 통해 참여기회의 확대와 용적률의 확대, 개발이익 환수의 보강으로 수익성 보강할 수 있음.(p196)

##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단지는 조성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관련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정부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에 대한 연구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및 타당성분석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정책 당국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계획의 효과측정 차원에서 사전적 분석으로 이루어진 연구. 둘째, 지역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건설투자의 지역파급효과, 산업단지 조성 이후의 분양 및 공장 가동에 따른 지역 내 생산, 고용,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 셋째, 지역경제 발전에 산업단지 개발이 효과를 발휘하는 지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연구 최근희·조윤영 (2009)

- 2002년 3개였던 인쇄·출판업의 경우 2007년 현재 173개로 증가했음. 고용자수는 2002년 255명에서 2007년 2,862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생산액은 2002년 75억원에서 2007년 약 4,200억원으로 급증하였음.(p185)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개발 및 가동에 따른 효과는 지출금액 대비 약 2.34배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 파주시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큼을 알 수 있음.(p194)
- 문화산업단지의 경우 체계적으로 입지업종을 선별하여 유치하여 효율적으로 산업간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여야 함. 문화산업단지가 입지할 곳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단지로 계획하고, 문화적 특징을 살린 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산업단지 자체를 문화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p194)

## 산업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연구 안혁근 (2010)

- 탈 농촌화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 지자체들 중 몇몇은 지역의 특화산업을 유치하여 인구 감소를 둔화시키고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사업체수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의 자체수입 향상에 성공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안의 공간 활용만을 위한 무조건적인 산업단지의 유치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p148)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업종을 입주시킨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체수입액이 증가한다는 공통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음.(p148)

### 산업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종호·김진수 (2012)

- 고용유지성 측면에서 산업단지는 일반적으로 수명주기를 가지며, 수명주기에 따라 고용 유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 산업단지 수명주기 측면에서, 초기단계와 성장단계에서는 신규 고용 창출 및 기존인력의 고용 유지 가능성이 높은 반면, 쇠퇴단계에 도달하면 산업단지 총 고용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p580)
-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일시적이지만, 단지 조성에 따라 제조업의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의 창출 기회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산업단지 입주 시 고용이 가장 증가될 직종은 상용직이며, 그 중에서도 생산기능 및 제조기술 분야의 고용 증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p582)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김진수·이종호 (2012)

- 경상남도 김해, 산막, 함안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생산 및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지조성단계와 기업입주단계에서는 취업유발효 및 생산유발효과가 산업단지별 토목공사관련 지출비용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는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의 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p390)
- 이는 기업입주단계에 있어 단순히 산업단지 면적의 크기가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어떠한 시설이 설치되느냐에 따라 생산유발효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p400)

### 첨단산업단지가 주변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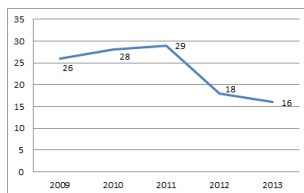
박동웅·이주형 (2012)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첨단산업지구 연접지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단지의 독립적 개발이 아닌 주변 환경을 고려한 계획적 재생(기반시설 단지 내부집중, 지원시설의 연접지역 배치, 친환경 교통수단 등)이 이루어도록 해야함.(p4549)



## [산업단지] 키워드 분석리포트

\* 발표 논문 수



### 1. 최근 5년간 국내 발표 논문 수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논문수	26	28	29	18	16
전년대비 성장률		8%	4%	-38%	-11%

### 2. 주요 저널

순위	저널명	전체 논문 수
1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
2	국토계획	7
3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7
4	산업입지	6
5	한국도시계획학회 논문집	6
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논문집	6
7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집	5

### 3. 국내 주요 연구자

[박용치] [강호] [구양미] [김선우] [하권찬] [이종호]  
 [오덕성] [장석명] [반영운] [이종호] [이현주] [전문환] [이원빈]  
 [최정석] [이인희] [서정수] [최근희] [안우영] [조성익] [이철우] [장인석]  
 [주경식] [백경민] [김태균] [김경배] [김진수]

### 4. 주요 관련 키워드

[구조고도화 사업] [아파트형공장] [재생] [기업이전] [생태산업단지] [산업입지]  
 [평가지표] [혁신] [Industrial cluster] [산업단지] [Knowledge management]  
 [클러스터] [도시재생]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Governance] [Industrial complex]  
 [노후산업단지] [지식경영] [지식산업센터] [문화산업] [계획입지] [산업클러스터]

## [산업단지] 관련 주요 논문리스트

\* 검색 키워드 : 산업단지, 노후산업단지, 쇠퇴산업, 산업클러스터

\* 검색 사이트 : www.auric.co.kr, www.ndsl.kr

제목	저자	수록지	발행일	권호
1 DEA와 DEA-window 분석을 이용한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성 측정	유종훈 ; 이종근 ; 이만형	국토계획	2013	v.48 n.3(통권 198호)
2 농촌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의 이용실태 및 시설 평가 연구	윤요선 ; 류수훈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2013	v.15 n.1
3 산업단지내 교통안전시설의 합리적 설치방안 연구	변완희 ; 김태균 ; 이승호 ; 장혜선 ; 이석규	토지주택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43호
4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이용실태분석 및 효율적인 공급방안 연구	이현주 ; 김태균 ; 이삼수 ; 김선우	토지주택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44호
5 생태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연구	추교진 ; 김경배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	
6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포괄적 전기안전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 제안	송길목 ; 김화순 ; 이현수 ; 최종섭 ; 이성일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2013	
7 지속가능한 복합산업단지 계획요소 도출 및 적용 사례분석	성재욱 ; 오덕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3	v.14 n.8
8 첨단 의료산업분야 정책형성과정 연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을 중심으로-	정용일 ; 김상태	기술혁신학회지	2013	v.16 n.3
9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요인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정순구 ; 최근희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2013	v.26 n.3
10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별 산업입지 비교우위에 관한 연구	장인석 ; 성장환 ; 정연우	LHI Journal	2013	v.4 n.3
11 노후 공업단지 공장 임대료 형성요인 분석	신승우 ; 김동원 ; 장준경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집 <주거환경>	2012	v.10 n.3(통권 19호)
12 북한내 산업단지 개발시 U-City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최희철 ; 진상윤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	
1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하권찬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2012	v.25 n.2
14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김진수 ; 이종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12	v.15 n.3
1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복합용도개발방안 연구	이현주 ; 윤정중 ; 송영일 ; 김선우	토지주택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61호
16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진화와 역동성 - 클러스터 생태주기 분석을 중심으로 -	구양미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2	v.18 n.3
17 첨단산업단지가 주변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박동웅 ; 이주형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2	v.13 n.10
18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	이은영 ; 김정곤 ; 이현주	環境復元綠化	2012	v.15 n.4
19 GIS를 활용한 생태산업단지 및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강경호 ; 방건석 ; 손홍규 ; 정재훈 ; 김창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2011	v.19 n.1

제목	저자	수목지	발행일	권호
20 IPCC 방법을 이용한 시화·반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연구	안재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1	v.11 n.2(통권 48호)
21 국가산업단지 실태분석을 통한 교통만족도 향상방안	조기술 ; 이우중	국토계획	2011	v.46 n.7(통권 188호)
22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클러스터 형성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문진주 ; 이기동	디지털정책연구	2011	v.9 n.5
23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연구	최정석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2011	v.24 n.3
24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계획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이성희 ; 전우선 ; 오덕성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	
25 노후산업단지의 재생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외 사례중심으로-	박은병 ; 박인	대한부동산학회지	2011	v.29 n.1
26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효율화 방안 사례연구	홍준호 ; 김경배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	
27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 선호도 연구 -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성상준 ; 하권찬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2011	v.11 n.3
28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 네트워크 활성화 방법론	문문철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1	v.12 n.4
29 산업단지 업체가동률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임윤환 ; 김태중	국토계획	2011	v.46 n.5(통권 186호)
30 산업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김대근 ; 강명구	국토계획	2011	v.46 n.6(통권 187호)
31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전략 연구	이재용 ; 문추연 ; 박진식 ; 장성호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1	
32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경영자와 종사자 의향 분석을 통한 재생 정책 연구	양대웅 ; 김철홍	부동산연구(구-감정평가연구)	2011	v.21 n.3
33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과정의 시계열 분류 및 특성 연구	박태원 ; 최정호	國土研究	2011	v.68
34 인천 북항 배후지 목재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목재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이두용 ; 장정환 ; 조용철 ; 남영우 ; 정명호 ; 양용구 ; 이창호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	v.13 n.3
35 인천지역 게임 산업단지 설립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남기찬 ; 이병민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011	v.11 n.4
36 입지계층분석을 활용한 산업단지 유지 업종 결정에 관한 연구	소진광 ; 이현주 ; 김선우	LHI Journal	2011	v.2 n.4
37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홍성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장동민 ; 박동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1	v.12 n.4
38 한국 산업단지별 클러스터 평가 및 경쟁전략 수립	구상욱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1	v.12 n.8
39 한국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개선방향	공형욱 ; 고재철	한국유화학회지	2011	v.28 n.4
40 충청북도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자원 순환 네트워크 특성 분석	전문환 ; 강호 ; 이인희 ; 백경민 ; 반영운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1	
41 경기 가구단지의 디자인 경쟁력 구축을 위한 산업육성 방안 - 이태리 밀라노 가구단지의 선진화 모델을 중심으로 -	강신우	한국가구학회지	2010	v.21 n.2
42 산업단지 공장시설의 주차수요예측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안우영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10	v.30 n.1-D
43 산업단지 내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	박철우	산업입지	2010	v.37
44 산업단지 재생과정에서의 이전대상업체 선정기준	김준형 ; 이상호 ; 임윤택	국토계획	2010	v.45 n.4(통권 178호)
45 산업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안혁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0	v.14 n.1
46 산업단지의 고용변화와 일자리 창출방안	임종인	산업입지	2010	v.37

제목	저자	수록지	발행일	권호
47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근무환경 및 종사자 거주패턴분석	이운란 ; 이동욱 ; 김홍규 ; 이재선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48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만족도 분석	박영권 ; 오지돈 ; 박찬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49 수도권 산업단지(클러스터)의 광역권 내부 및 외부 연계구조 분석	구양미 ; 남기범 ; 박심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10	v.13 n.2
50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 성과평가지표 개발	반영운 ; 주경선 ; 정현근 ; 황규환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2010	v.23 n.1
51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지역 특화를 위한 색채계획	박연선 ; 손동승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010	v.24 n.1
52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녹지자연도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이지수 ; 이승욱 ; 홍원화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0	v.2010 n.01
5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이용후평가	권니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0	v.10 n.2(통권 42호)
54 기업간 물질 순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태산업단지 구축	전문환 ; 강호 ; 이인희 ; 백경민 ; 반영운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0	
55 물질 순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친환경 산업단지 구축	전문환 ; 강호 ; 이인희 ; 백경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0	
5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계획기준 연구	안정근 ; 고재우	국토계획	2009	v.44 n.7(통권 174호)
57 개별입자공장의 계획적관리를 위한 준산업단지, 공장입자유도지구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홍구 ; 장준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58 도시 지역 공장재개발수단으로서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연구	이미숙 ; 최근희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2009	v.22 n.2
59 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입지요인 분석	김종중 ; 김갑성	국토계획	2009	v.44 n.7(통권 174호)
60 부산 신항 배후단지 유치산업의 선정에 관한 연구 -한.중.일 국제분업구조와 부산항의 대.중.일 수출입구조 분석에 따른-	김정수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09	v.25 n.4
6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홍진기	KIET 산업경제	2009	v.2
62 산업단지 분양가격 차별화 방안에 대한 실증분석	장인석 ; 이현주	응용경제	2009	v.11 n.2
63 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류승한	국토	2009	v.330
64 산업단지 환경시설관리의 문제와 개선방안	최정석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2009	v.22 n.1
65 산업단지의 환경실태 및 개선방안	조경두	산업입지	2009	v.33
66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현황 분석을 통한 개발 방안 연구	김희중 ; 심재현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67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지정·개발 체계 개선방안	이원빈	KIET 산업경제	2009	v.129
68 입지 특성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입지유형 분류 및 개발계획 분석 연구	여인대 ; 배웅규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9 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의 유치산업 분석 : 포항 영일만항 사례를 중심으로	하영석 ; 조혁수	海運物流研究	2009	v.60
70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최근희 ; 조윤영	한국도시행정학회	2009	
71 해외 생태산업단지 추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반영운	산업입지	2009	v.33

## DDP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서울 중구 을지로 7가에 위치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조선 후기, 조선시대 신식 군대인 별기군의 훈련원이자 임오군란의 발생지였던 곳으로, 특별한 역사를 품고 있다. 1926년 일본은 이곳에 당시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성운동장을 건립했다. 해방 이후 경성운동장은 서울운동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1959년에 부속야구장을 건립하면서 고교 야구대회의 전성기를 누리던 곳으로 활약하게 된다. 1985년, 잠실에 서울종합운동장(현 잠실종합운동장)이 새로 건립되면서 동대문운동장으로 그 명칭을 바꿔 2007년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다.



2005년에 서울시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6년에는 본격적인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이 추진 되었으며, 2007년~2008년 사이에 야구장과 축구장이 차례로 철거되면서 본 사업은 더욱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은 당시 서울시의 슬로건이었던 '디자인 서울'을 대표하는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였으며, 공공기관 최초로 '국제지명초청경기방식'의 설계안 선정이 이루어졌다.



최종 설계안은 이라크 출신의 여성건축가 자하하디드의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자하하디드는 24시간 쉴 새 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동대문의 역동성에 주목해 주변 맥락은 물론 DDP를 통해 동대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환유의 풍경'을 제안했다. '환유의 풍경' 콘셉트에 기반을 둔 DDP의 형태는 공간의 유연성은 물론, 한국적 전통과 끊임없이 변모하는 디자인의 미래를 모두 담고 있다.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토대로 한 유기적 형태의 DDP는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5개(알림터, 배움터, 살림터, 어울림광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3월 21일 개관과 동시에 개관 행사로 '2014 서울패션위크'가 열려 개관 첫날 150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했으며, 현재도 꾸준히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DDP에서는 5대 전시('간송문화전', '스포츠디자인전', '자하하디드\_360도', '엔조 앙리 디자인전', '올름 디자인 그 후')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 지금보다 좀 더 창의적이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이경신(DDP 홈페이지 소개글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백서' 참고)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31-9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B 706-1, 230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908, Korea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